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청소년 복지태도의 유형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 상 미

2016년 2월

A study on the typology of adolescence'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Kim, Sang-Mi

(Direct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6.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청소년 복지태도의 유형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진열

김상미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김상미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황경수



위원

문성호



위원

유씨구



위원

심경수



위원

남진열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12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구성	7
3. 연구의 주요 개념들	10
1) 복지태도	10
2) 인권의식	11
3) 정치효능감	12
4) 대중매체 이용경험	12
II. 이론적 배경	14
1. 종속변수: 복지태도	14
1) 복지태도의 개념	14
2) 복지태도의 형성 및 영향요인	17
3)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21
4) 복지태도의 유형과 특성	26
2. 독립변수	34
1) 인권의식	34
2) 정치효능감	45
3) 대중매체 이용경험	48

3. 선행 연구 고찰	52
1) 복지태도의 다차원적 관점	52
2) 복지태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55
III. 연구방법	60
1. 연구모형	60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61
3. 연구 변인	62
1) 종속변인	63
2) 독립변인	64
4. 분석 방법	67
IV. 연구결과	69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9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70
3. 복지태도 유형화에 따른 영향분석	74
1) 복지태도의 1차원 분석	74
2) 복지태도의 2차원 분석	78
3) 복지태도의 3차원 분석	90
4.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2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102
2) 복지태도 구성요소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4
3)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8

V. 결론 및 제언	110
1. 연구결과 요약	110
2. 연구의 함의	114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 설문지	131
<부록 2> 요인분석 후 설문문항 구성	140

표 목 차

<표 1> 복지태도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 연구	23
<표 2> 복지태도의 내용 구성	25
<표 3> 복지태도의 3요소	26
<표 4> 복지태도의 유형 구분	30
<표 5>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목록 분류	42
<표 6> 설문지 배포현황	62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9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71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평균비교	72
<표 10> 복지태도 구성요소의 빈도분석	74
<표 11> 국가책임에 대한 영향요인	75
<표 12>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76
<표 13>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77
<표 14> 제1유형과 제2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79
<표 15> 제1유형과 제3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0
<표 16> 제1유형과 제4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1
<표 17> 제5유형과 제6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3
<표 18> 제5유형과 제7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4
<표 19> 제5유형과 제8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5
<표 20> 제9유형과 제10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7
<표 21> 제9유형과 제11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8
<표 22> 제9유형과 제12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89
<표 23> 복지태도의 유형분포	90
<표 24> 학교급별 복지태도 유형 분포	91

<표 25> 민간주도 이타형	93
<표 26> 국가의존 이타형	94
<표 27> 민간의존 이타형	95
<표 28> 국가주도 배타형	96
<표 29> 민간주도 배타형	97
<표 30> 국가의존 배타형	98
<표 31> 민간의존 배타형	99
<표 32>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및 유형별 영향요인	101
<표 3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103
<표 34> 국가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104
<표 35>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106
<표 36> 실천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107
<표 37> 복지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10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9
[그림 2] 복지태도의 형성과 표출의 메커니즘	19
[그림 3] 복지의식 유형 : 복지책임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	28
[그림 4] 복지태도의 유형별 점수 분포	32
[그림 5] 연구 분석의 틀	61
[그림 6] 복지태도 유형: 국가책임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78
[그림 7] 복지태도 유형: 국가책임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	82
[그림 8] 복지태도 유형: 효과성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	86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 중학교 316명, 3개 고등학교 345명, 2개 대학교 310명으로 총 97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와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별 수준은 국가책임(4.30점), 효과성(3.88점), 실천의지(3.87점)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높은 평균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복지태도의 수준은 여자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복지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셋째, 복지태도를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복지태도의 영역을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 등의 여덟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의존 배타형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주도 이타형이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어떠한 영향요인에 의해 바람직한 복지태도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별 분석인 1차원 분석, 2차원 분석, 3차원 분석에서는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에서는 부모와 함께 영상물 시청을 하는 집단일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적 효능감에서는 내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복지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책임에서는 가정소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인터넷 의견교환,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기능의 효과성에서는 학교급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인터넷 의견 교환,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 내재적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복지실천의지는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

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 전체에 대해서는 가정소득,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인터넷 의견교환,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 내재적 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복지태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복지태도를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복지태도를 세 가지 구성요소의 높고 낮음을 조합한 1차원 분석, 2차원 분석, 3차원 분석 등을 통해서 여덟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국가의존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으로 명명된 여덟 가지 유형은 청소년의 복지태도 실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복지태도의 재개념화는 복지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넷째,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복지태도 실태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복지태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복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녀에 따른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복지교육정책을 달리 시행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교과서가 복지태도 함양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통합사회과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복지태도를 고르게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에서의 복지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유형화 하였고,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복지태도,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복지태도의 유형,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복지제도의 발전,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복지태도에 대한 변화된 모습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별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등 특이성 때문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은 복지정책의 형태가 국가별 혹은 분류 유형별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각 나라의 복지정책 유형은 다를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의 도입과 정착이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조직화된 사회적 결과라고 볼 때, 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복지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복지태도는 과거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변동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중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복지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성향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류진석, 2004). 국민가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적 가치차이가 사회복지발달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소라고 주장한다(김종일, 2009). 그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수준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주요구성원이 될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현재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지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는 작업은 복지국가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던 과거에는 국가정책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들 역시 정책결정에 큰 눈길을 주지 않았다(주은선·백정미, 2007).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복지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복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적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복지태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될 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복지태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복지태도 자체의 개념적 구성도를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 복지의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간 관계 분석 및 그룹별로 비교한 연구들,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류진석, 2004; 안상훈, 2009; 주은선·백정미, 2007).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연구 유형을 동시에 분석해 봄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복지태도¹⁾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면적 가치로서 인권의식,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화인 대중매체 이용경험, 복지정책, 복지교육 등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형성된 정치효능감 등 세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의식(意識)을 나타내는 용어로서는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집단의 식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치(價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체생활 속에서 지녀야 할 다양한 가치 중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인간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줄

1) 본 연구를 위한 복지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이나 문화 등 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진 인식하고 있는 재분배의 원칙, 그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제도 즉 복지비용, 그리고 복지기능의 정당성 등 제반 복지내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이라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지태도의 하위변인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개인/국가), 복지의 적극적 실천 의지(높음/낮음) 및 복지제도의 효과성(높음/낮음)이라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면서 그 사회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고유한 가치이다(박정서, 2011).

인권 의식은 개인 이해관계에 대한 이성적 계산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감정적인 응답을 자아낸다는 특성이 있으며, 감정적인 형성은 초기 사회화 과정의 결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에 구조화되는 인권의식은 성인기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인의 단기적인 물질적 이해관계의 영향력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환수, 2015).

이러한 청소년기의 인권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 2001년 5월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2007년부터 인권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여성부(2001)의 신설은 국가적 차원의 인권 제도 마련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제3조 제1항),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역할, 참여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제4조), 청소년의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차별금지조항과 제13조의 표현의 자유협약내용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들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미풍양속으로 여기며 연령차별이 관행화된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한국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 논란은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문진영, 2013). 아르바이트와 같은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근로

기준법상의 최소한의 보호조치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박창남·문성호·이혜정, 2003).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인권 문헌이나 원칙을 넘어서 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2008). 현재 청소년 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청(2010), 광주(2011), 서울(2012), 전라북도(2013)등 네 지역에서 제정·공포하였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6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인권옹호관 설치, 정규교과 시간외 교육활동 강요금지, 학교기록 정정·삭제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자유 및 체벌금지 등을 골자로 의결 되었다. 이 같은 진보적 내용의 학생인권 조례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국제엠네스티, 참여연대, 인권실천 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청소년인권보호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시민사회 인권단체들도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람직한 인권의식의 형성은 법적·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행동 등 공동의 의식이 존재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자영, 2012). 인권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인권태도나 인권의식 형성에 공헌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습득된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복지와 관련한 상황들을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사가 친인권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복지태도가 높았고, 부모의 인권의식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태도 변인 중 복지책임이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인권의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정환수, 2015). 정환수(2015)는 김자영 등(2012)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인권의식 변수를 복지의식 변수로 수정·보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사회갈등과 분배정의와의 관계분석(류진석, 2004; 이성균, 2002; 이한나·이미라, 2010),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류

만희·최영, 2009; 이인재, 1998; 최균·류진석, 2000) 등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 대학생 대상으로 학년, 전공, 성별, 부(父)의 생활,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대학문화, 부모의 복지태도, 복지경험 등이 미치는 영향 연구(김상관, 1985; 박병헌·홍보선, 1995; 정환수, 2015),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별, 학교, 학년, 거주지역, 성적 등의 변수와 복지태도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김경옥, 2002),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김영모, 1985) 등이 있다.

인권 의식과 복지태도 간의 경계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두 요인은 그 형성과정에서 상이한 성격을 갖는 가치이므로 기존 연구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 의식과 복지태도 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복지태도로서 복지실천의 지(높음/낮음), 복지책임주체(개인/국가), 복지제도 효과성(높음/낮음)이라는 세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현재 복지태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권 의식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제3세대 인권)로 구성하여 인권 의식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나 가치관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은 여러 정치세력과 사회집단 혹은 구성원의 가치관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합의 혹은 갈등을 생산하는 복지정치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김운태 외, 2013). 이와 같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지태도에 따라 복지정책과 복지정치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복지정책과 복지정치가 따라 복지태도의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구조는 사회집단의 연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Esping-Andersen, 1990: 임준형, 2013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복지정책과 제도의 형성과 전개는 정치적 산물임과 동시에 사회 연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복지정책과 제도는 다시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복지국가에서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복지태도는 개인 일면의 양상일 뿐 아니라 사회단위의 집단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회 단위 집단의 현상은 다시 복지정책과 제도, 정치적 맥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호적 영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복지태도,

복지정책, 복지정치는 복지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정치적 관점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옹호활동에 복지태도와 정치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권의식과 관련된 정책옹호 영역에서 복지태도는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병년,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권의식, 복지태도 및 정치효능감이 상관성이 있는 연구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문적으로 탐구해 볼만한 영역이라고 여겨진다. 성인 및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복지정책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 교육복지 등을 집행할 때,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다(윤동섭·문성호, 2010). 청소년의 건강한 정치효능감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문화형성 수단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의 이용 경험을 통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제공받는 정보를 통해 그에 맞는 역할과 행동, 가치관 등을 습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의 매체의 영향은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 등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그 메시지와 심리적으로 동감하도록 모방의 기능을 촉진시켜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교육은 TV 등 대중매체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하다. 대중매체는 감정이입을 통한 상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교육적 효과가 높다.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복지의식 및 태도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본연의 프로그램은 극히 짧은 시간을 할애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기획상의 치밀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박정환,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뉴스 매체 시청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복지태도 및 인권의식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박영숙, 2004). 이는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 경험은 청소년의 가치관과 관련된 요인과의 관계규명을 밝히는데 매우 적절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

에서는 청소년기의 매체 노출 경험이 복지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권의식과 정치효능감 및 대중매체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 방향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여, 학교급별 복지태도의 특징, 차이점 및 유사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복지태도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가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양옥경, 2002; 주은선·백정미, 2007)가 도출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 분석을 통해 복지태도의 유형에 맞는 복지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태도함양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청소년기의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복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의 바람직한 복지태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청소년의 복지태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문제 및 구성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살펴보고자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복지태도의 개념을 고찰하고, 복지태도의 세부 구성요소를 분류하여 복지태도 유형화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 중

청소년의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특히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등에 따라 위의 세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요인별로 복지태도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개의 주요 연구 내용 -- 가)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 나)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가)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

-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나)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어떠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복지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어떠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가?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본 연구 주요 구성요소들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복지태도의 개념을 고찰하고, 복지태도가 포괄하는 하위차원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지태도를 범주화한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에 대해 개념화하는 연구를 수행한 후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수행을 통해 연구문제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연구를 구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정교화하고, 이때의 연구변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세부적인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에 대해 논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밝혔다. 청소년 복지태도의 구성요소에 따라 나는 유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각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논의결과를 실증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에서 확인된 결론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본 연구가 앞으로의 청소년의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법적·제도적·교육적 접근 방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태도의 개념, 형성 및 영향요인 ○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 복지태도의 유형화 ○ 인권의식과 정치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의 개념정리 ○ 복지태도,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및 대중매체 이용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주요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 ○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 중·고·대학생 <table border="1" data-bbox="507 1261 1193 1541"> <tr> <td data-bbox="507 1261 523 1541" rowspan="4">자료 분석</td> <td data-bbox="523 1261 1193 1339">·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 분석</td> <td data-bbox="1193 1261 1361 1541" rowspan="4">SPSS win 20.0를 활용한 분석</td> </tr> <tr> <td data-bbox="523 1339 1193 1395">·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td> </tr> <tr> <td data-bbox="523 1395 1193 1451">·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td> </tr> <tr> <td data-bbox="523 1451 1193 1541">·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에 따른 영향 요인 ·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td> </tr> </table>	자료 분석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 분석	SPSS win 20.0를 활용한 분석	·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에 따른 영향 요인 ·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료 분석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 분석		SPSS win 20.0를 활용한 분석					
	·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에 따른 영향 요인 ·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도출 							
<p>청소년의 복지태도함양을 위한 논의 및 함의</p>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3. 연구의 주요 개념들

1) 복지태도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란 복지에 대한 종합적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함께 복지규범이나 공정한 배분방식 등과 같은 가치지향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준용, 2015). 테일러-구비(Taylor-Gooby, 1985)는 복지비용과 세금문제,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당위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향을 복지태도라고 규정하였다. 신광영 외(2000)는 복지의식을 추상적인 가치관이나 개념적 특성 이외에 인간의 행동, 의식작용, 주관적 결정을 일컫는 것으로 그 의미를 넓히고 있다. 그 동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태도는 복지에 대한 의식, 인식, 평가, 태도, 감정, 신념 등의 내적인 측면과 개인의 복지에 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정의에 함축된 내용을 총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복지태도는 그 사회의 제도적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중지시키기는 기능을 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성격과 방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복지태도는 사회복지의 상황과 문제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책의 결정이나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이준용, 2015). 넷째, 복지태도는 개인적인 성격보다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며, 교육이나 문화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성을 지닌다(최균·류진석, 2000; 김신영, 2009)

본 연구를 위한 복지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이나 문화 등 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진 인식하고 있는 재분배의 원칙, 그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제도 즉 복지비용, 그리고 복지기능의 정당성 등 제반 복지내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이라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지태도의 하위변인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개인/국가), 복지의 적극적 실천의지(높음/낮음) 및 복지제도의 효과성(긍정/부정)이라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 인권의식

인권의식(awareness of human rights)이란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자영, 2012).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 실천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화에 대한 갈등의 문제, 인권현실의 진단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 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및 인권지수 연구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NAP에 제시된 3대 영역인 제1세대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3세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의 권리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현안이나 쟁점,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세대 인권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자신의 문화를 보전하고, 종교적 실천을 구현하고, 단체 조직에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규약은 고문, 노예제, 잔혹하고 굴욕적인 처우, 차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세대 인권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3세대 인권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의 권리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의 인권 등이 해당된다.

3)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개인의 견해가 정치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이다. 즉 개인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정부 기능 및 정부 과정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이런 변화에 각 개인의 정치행위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정치효능감은 민주주의의 원칙 또는 운영이 있어서 정치적 지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김수지, 2015; 신재선, 2012). 정치효능감은 크게 자신의 정치 효과성 혹은 자신감을 반영하는 내재적(internal) 효능감과 정치체제의 반응성에 대한 일반 인식을 반영하는 외재적(external) 효능감으로 나뉜다(강내원, 2004).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개인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얼마나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것이다.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개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정도에 관한 신념이다.

본 연구를 위한 정치효능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행동을 취했을 때, 정치 시스템이 이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에 관한 인식’이다. 내재적 효능감이 개인의 능력 및 자원에 기반 한 효능감이라면 외재적 효능감은 제도 기반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Craig, Niemi, & Silver, 1990: 최정화,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을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이라는 두 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4) 대중매체 이용경험

대중매체는 대중문화의 전달과정에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를 이어주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음성매체(TV, 라디오), 영상매체(영화), 뉴미디어(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의 모든 대상에게 대량의 정보를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김선남, 1997).

매스미디어로 불리는 대중매체는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광고 선전의 메시지처럼 직접적으로 설득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는 부차적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모방학습 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한 사회화는 비의도적이고 무의식적이며, 간접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용과정에 있어서 저항

감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매체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자의 의견, 태도,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매체는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 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매체를 활용하는 사회의 구조 또는 풍토가 건전한 환경으로 조성 될 경우, 교육, 문화, 경제,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청소년 가치가 매체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육적 기능으로 공헌할 수 있다(윤태영, 198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대중매체 이용경험을 설정하였으며, 하위변인으로는 인터넷 정보이용, 인터넷 의견교환 및 영상매체의 기능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화 및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론적 기반이 되는 복지태도의 개념 및 복지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범주들을 살펴보았다. 고찰된 청소년 복지태도의 하위요소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기술하였다. 또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개념정리를 하였고 이들 간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종속변수 : 복지태도

1) 복지태도의 개념

학자에 따라 복지태도, 복지의식, 복지인식, 복지의견, 복지여론 등과 같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각각 분산적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학 연구 분야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동의된 용어가 부재하고 개인별, 학자별 규칙적이지 못한 용어의 사용은 거시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중시키고, 미시적으로는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학자와 연구자들 스스로도 깨닫고 있어 명확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정책 형성의 기본토대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특히 재분배를 위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압력을 가하는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과정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 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이 확보 될 수 있다(Briggs, 1961; 김영순·여유진, 2011; 전주현, 2013 재인용).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그 국가의 복지제도 형태와 방향성이 형성되기도 한다(류만희·최영; 2009, 류진석, 2004). 이러한

점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한 국가의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집단적인 형태가 되어 사회 복지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취합하여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전주현, 2013).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에서 복지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복지태도는 개인이 표출하는 복지에 대한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접근으로 테일러 구비(Taylor-Gooby, 1985)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주요 동기를 분석한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동기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가치, 단순한 자기 자신과의 이해관계, 마지막으로 복지 사상과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복지태도는 세금과 복지비용 문제, 소득의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회적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강정규, 2014). 류진석(2004)은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 주체, 구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복지태도는 보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체계의 구성적 특징인 복지비용, 복지프로그램의 선호, 복지제도의 정당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태도의 인식 주체는 정부관료, 전문가집단, 이해관계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가치, 태도, 행동지향을 복지태도의 구성영역으로 보았다(류진석, 2004).

복지의식을 주제로 하는 국내 연구들에서는 복지의식의 개념에 복지태도의 행동지향적인 특성을 포함시킨다거나 복지태도와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고(김경동, 1992; 김상균·정원오, 1995; 박병현·홍보선, 1995; 류만희·최영, 2009),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우아영, 2000). 그러나 태도(attitude)는 의식(consciousness)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복지의식은 복지에 대한 감정과 사상, 가치와 신념 그 자체를 의미하며,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을 밑거름으로 한 행동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중섭, 2009). 따라서 복지태도(welfare attitude)가 복지에 대한 인식과 가치평가, 행동지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 태도의 특성을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정리하면 첫째, 사회적으로 획득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개인이라고 하

더라도 집단적 성격을 지니며 둘째, 한 사회의 복지제도와 연관된 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당위성이나 향후 복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태도의 개념을 복지국가와 복지제도, 복지정책에 대해 생활 속에서 학습된 사상이나 관점, 인식과 재현, 판단 등을 내리는데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신적 중재 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이훈희·김운태·이원지, 2011). 복지태도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복지에 관한 논쟁거리에 관하여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조남경, 2013). 김상균·정원오(1995)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복지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사회제도, 복지체계, 복지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태도 혹은 의식을 복지태도(의식)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복지태도는 복지 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 특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과 그 쓰임이 다소 다른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복지태도에 대한 담론과 분명한 정의의 설정은 앞으로 남겨진 학계의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복지태도는 복지 제반 내용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판단에 의해 표현된 의견 혹은 선호도, 만족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혼란을 가져 왔던 복지태도, 복지의식, 복지인식, 복지의견, 복지여론 등과 같은 복지에 관한 용어를 복지태도로 통일해 기술하였다.

복지태도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을 둘러싼 전개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살펴보는 작업은 단순한 복지태도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수준을 넘어 현재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당위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될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복지를 에워싼 논쟁들도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복지태도를 둘러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지금의 한국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정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해 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복지 태도는 복지국가와 복지제도, 복지정책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습득된 선경험이 개인의 사상과 관점, 경향,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특정한 경향을 가지게 하는 정신적 조정 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청소년은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등 직접적인 경험과, 가정에서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및 복지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과 인식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복지정책과 복지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사상과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는 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곤·김수정·문성호, 2013).

2) 복지태도의 형성 및 영향요인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모델과 관련된 앞선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크게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based approach)과 이론중심적 접근(theory-based approach)으로 구별된다. 국내학자들의 연구동향을 보면, 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 등과 같은 요인 중심에 따른 복지태도의 영향력을 연구하고 있다(류진석, 2004; 이아름, 2010; 전주현, 2013). 반면에 이론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이론적 관점으로 계급을 중심으로 한 담론(김영란, 1995; 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따른 복지지위체계에 대한 연구(안상훈, 2009)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선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인 성별변수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차별 대우, 가족에 대한 보호부담 등으로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아 복지친화적인 태도를 갖는다(Svallfors, 1995; 류진석, 2004 재인용). 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기이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의 보편화, 노동시장 진입장벽의 와해 등은 노동시장참여의 유연성과 용이성이 복지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태도 영역에서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Van Oorschot, 1999). 연령변인인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실업에 대한 위험성, 저축부족 등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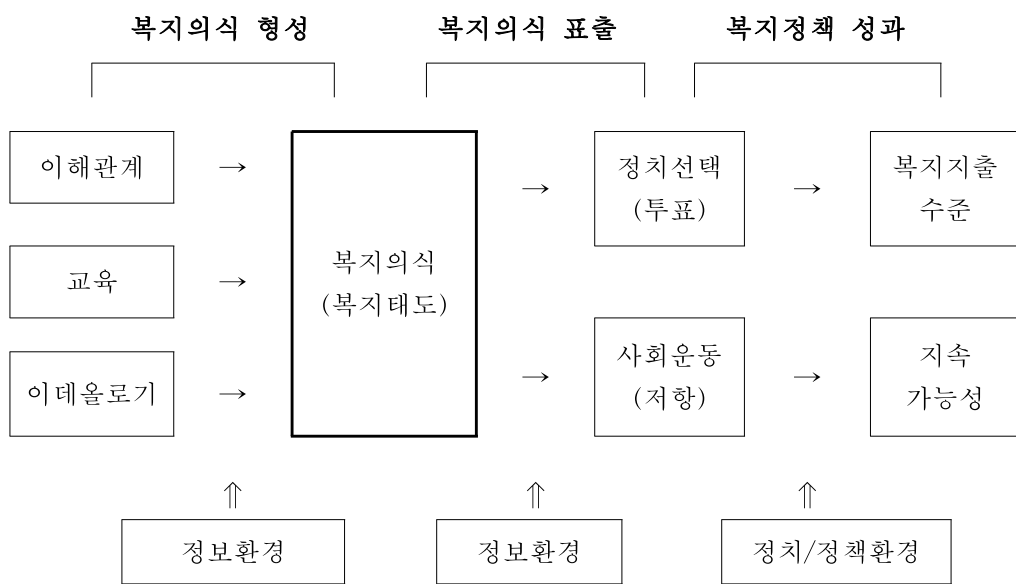
복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퇴직노인이나 연령이 많을수록 복지에 의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있어서도 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 (Kluegel & Miyano, 1995). Hansenfel 와 Rafferty에 따르면, 복지의 평등증진을 위해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책임성은 교육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지도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라고 논하고 있다(1989).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관한 김신영(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기반 관련 변수 중 집단변인들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복지태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논의하고 있다(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Svallfors, 2003). 자본가 집단에 비해 노동집단, 중간집단이 복지친화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집단 변수에 의한 복지태도의 설명력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적 지위기반 관련변수는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 복지의 비용부담을 갖는 납세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라는 지위가 오히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안상훈, 2009). 요약하면, 복지를 공급받는 복지수급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 긍정적인 복지태도가 나타난다. 반면에 복지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복지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호의적인 성향이 낮아진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자기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호의적인 복지태도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지향과 관련된 변인은 Van Oorschot(1999), Mau(2001), Lewin-Epstein, et al.(2003)의 연구 등을 통해 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응성, 분배정의, 사회갈등의 수용이라는 변수로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가치지향으로서 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응성이 높을수록, 평등주의적 분배정의에 입각할수록, 사회갈등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이나 문화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 복지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내세우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중매체 등 다양한 정보환경에 의해 그러한 복지 의식 또는 복지태도가 매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oss, 2000; Cook, 2006; 노대명·전지현, 2011 재인용). 사회학자인 Goffman(1974)이 주창한 ‘틀짓기 이론(Framing Theory)’에 따르면 대중들의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이해과정 즉, 경험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복지태도는 종종 복지전문가들이 쟁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론화되어 진다. 실제로 복지개혁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혜택을 공급 받는 빈곤층의 부정수급(fraud)을 드러내는 전술을 이용하는 미국의 경우, 1996년 복지개혁을 실시하는 정책방향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동일한 쟁점이 정책사안으로 부각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어떤 측면을 어떻게 여론화하는가에 따라 시민들의 태도가 상반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출처 : 노대명·전지현. 2011.

[그림 2] 복지태도의 형성과 표출의 메커니즘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과 관점에서 복지와 관련된 의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가 출발된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의식 또는 복지태도가 형성되고 표현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복지의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맞서 대립하는 상황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가 다루어야 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복지 메커니즘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되는 게 요구된다. 이에 노대명·전지현(2011)은 복지메커니즘에 대한 구성요소를 [그림 2]와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단계는 복지국가나 복지제도,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복지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복지에 관한 이해관계나 교육과정, 정치사상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삼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복지제도나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선택(투표)을 하는 표출단계이다. 복지이식이나 복지태도가 정치적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지정책의 결과와 성과로서 복지지출의 확대여부에 관한 단계이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이식을 통해 나타나는 욕구가 어떤 성과로 이어졌으며, 그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다.

복지이식과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지정책이나 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당위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가 정부차원에서 복지정책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과거의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를 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찰을 통해 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복지태도는 관념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복지태도가 모든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예상되는 합리성과 논리적인 한 방향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다. 간혹 동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인 예상치 못한 복지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복지태도는 단순한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인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항목을 다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김희자, 1999; 전주현, 2013 재인용).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선호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소득의 재분배, 복지국가의 당위성으로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고(Taylor-Gooby, 1985),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한 복지태도 연구에서 복지제도의 영역별 재정지출, 서비스 전달주체의 합당성, 재정부담에 대한 주제, 복지서비스의 오용 등 네 개의 차원으로 복지태도를 연구한 바 있었다(Svallfors, 1995). 또한 복지국가의 기능, 복지국가의 수단, 복지국가의 효과성, 복지국가의 재정지출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Anderß, H. & Heien, 2001).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하위요인들 중 복지유형, 복지기능, 복지책임의 주제, 복지비용의 네 가지 구성요인으로 복지태도를 연구하였다(전주현,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복지유형은 복지제공의 수혜범위에 따라 보편주의적 논리를 선호하는가, 선별주의적 논리를 선호하는가, 사회보험액의 지급에 있어 평등지향적 급여제공의 논리를 선호하는가, 소득비례적 급여제공의 논리를 선호하는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런 상이한 태도에 따라 복지제공의 범주, 복지의 특성과 역할담당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유형 및 논리의 지지성은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류진석, 2004)²⁾. 두 번째, 복지의 기능에 대한 태도영역이다. 사회구성원들은 복지가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복지의 당위성이 부여 될 수도,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복지기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는 복지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와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태도로도 볼 수 있다(전주현, 2013). 따라서 이는 크게 보아 복지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역기능을 하는지의

2) 복지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 보편주의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상정해 놓기보다 주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의해 선별된 저소득층만이 복지수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의 복지 선별주의(selectionism)나 잔여주의(residualism)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복지 보편주의로 이해되고 있다(Gilbert & Terrell, 2005). 그렇기 때문에 복지 보편주의는 완벽하게 모든 시민을 수혜의 범위로 설정한다기보다, 한정된 집단이 아닌 “광범위한 인구집단에 대한 포괄”이라는 연속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홍식 외, 2011). 보편주의 복지에 기반 한 사회복지정책은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 사회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복지의 선별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양극단의 관점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한다. 복지가 노동에의 의욕을 단절하고 빈곤층의 나태함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지, 아니면 빈부격차의 해소와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등을 도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다. 세 번째,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태도로서, 복지를 주되게 공급하는 주체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한다. 복지책임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시장, 국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 시대에 따라 그 선호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전개되어 왔다(Gilbert & Terrell, 2005: 김경우, 2011 재인용). 이러한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의 관점이 반영되어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이라는 상이하면서 연속적인 과정으로 분류된다. 개인선택의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는 복지에 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적복지의 지지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사회적 평등과 통합, 연대성에 기반을 둔 집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제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적복지의 지지와 관련이 있다(김신영, 2010). 네 번째, 복지비용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복지의 실질적 제공과 바로 연결되는 실천적 지향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와 복지비용 본인부담에 대한 태도라는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태도는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공적비용의 증감에 대한 태도로 구체화되었다.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태도는 복지의 실천의지가 강한 복지 확대 지지인 반면, 정부의 복지지출이 줄어야 된다는 태도는 복지축소와 각각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의 실천의지가 낮음과 관련이 있다.

<표 1> 복지태도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 연구

연구자 및 연도	조사대상	복지태도 구성요소
김영모 1980	서울시거주 성인 (N=2,000)	복지권, 빈곤, 교육, 주택, 노인문제 등
이소희·이재연 1987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N=400가구)	자유방임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연구자 및 연도	조사대상	복지태도 구성요소
김상균·정원오 1995	20세 이상 전국민(N=1,198)	복지와 관련된 9개영역(의료, 교육, 장애, 실업, 조세, 주택자산사업, 평등, 복지과 근면성)
김영란 1995	서울 및 수도권지역 20세이상 남녀 (N=604)	복지비용, 공적복지와 사적복지,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태도
이인재 1998	수원지역 주민(N=373)	교육, 의료, 실업, 주택, 장애인, 노인, 복지과 관련된 의식
최균·류진석 2000	전국 성인 (N=825)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실천의지, 복지책임주체 인식
이성균 2002	전국 성인(N=1,000)	복지책임주체
양옥경 2002	서울시민 20-60대 기혼 남녀 (N=1,131)	복지의식(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 복지정책육구)
류진석 2004	대전시민(N=35)	복지기능, 복지비용부담, 복지 원리,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
안상훈 2009	전국민(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 N=1,426)	복지국가의 찬성
김신영 2009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N=1,512)	국가의 공적 책임: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자, 소득격차, 주거
류만희·최영 2009	2006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N=1,677)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김영순·여유진 2010	2007 복지패널부가조사 (N=1,694)	정부지출 확대
김은지·안상훈 2010	20세이상 전국민 대상 (N=1,202)	정부책임영역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 (N=1,693)	성장과 분배를 위한 방향, 소득격차해소의 국가 책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
함철호·이중섭 2010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조사자료 (N=1,694)	수급자에 대한 인식, 복지지출에 대한 의견

연구자 및 연도	조사대상	복지태도 구성요소
김신영 2010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 전국18세 이상 성인남녀 (N=1,605)	국가의 공적 책임
노대명·전지현 2011	20세 이상 전국 성인대상 한국 인의 복지의식조사2011 (N=1,500)	재분배원칙과 복지제도, 복지재정확 충에 따른 조세부담의식, 복지원리에 대한 선호
김희자 2013	한국복지패널 2010(N=2,132)	기존 복지강화를 위한 정부지출확대, 복지영역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 확 대, 보편주의에 대한 확대
이준용 2015	안양시민 (N=623)	복지재정확충,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 지비용부담

출처: 이준용(2015)을 참고로 재구성.

복지태도를 복지비용과 관련하여 김영란(1995)은 세금증감,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복지비용의 증감, 공적복지와 사적복지에 대한 지지,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김희자(2013)는 사회보험 여부 및 노동력의 유무에 따른 김희자(2013)의 연구에서는 각 복지프로그램, 쟁점과 관련된 새로운 급여 내용을 담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복지구성 원리 등 세 차원으로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다. 복지태도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에 대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서술한 류진석(2004)은 비교적 다차원적인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준용, 2015).

복지태도의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한 노대명·전지현(2011)은 재분배원칙, 개별제도, 재정부담 등으로 유형화하여 연구하였다. <표 2>는 각 영역을 몇 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현실인식과 당위성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복지태도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슈로 현실인식과 당위성 차원이 혼동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몇몇 항목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답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범주간의 배타성과 포괄성이 보호되면서, 복지태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쉬지 않다. 특히 추상적 규칙과 연관된 항목은 그 모호함에 있어서 부자유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쉽게

생각하기에 힘든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각 주체가 주어진 대상을 어떻게 의식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다. 재분배 원칙에 대한 각 개인의 태도는 그 일관성과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핵심 관심거리이다.

<표 2> 복지태도의 내용 구성

범주	구성항목	차원	
		현실인식	당위성
재분배원칙	책임주체 : 국가 vs 개인		◎
	적용방식 : 보편 vs 선별		◎
	사회정의 : 공정 vs 부당	◎	
개별제도 (욕구/대상)	제도수용 : 지지 vs 반대	◎	
	지원방향 : 확대 vs 축소		◎
	우선순위 : 확대의 우선순위		◎
재정부담	지출부담 : 적정 vs 과도	◎	
	지출방향 : 확대 vs 축소		◎
	적용원칙 : 동율 vs 소득비례	◎	◎

출처 : 노대명·전지현,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복지태도에 대한 다양한 구성요소 중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차원과 복지실천의지 및 복지기능의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를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표 3> 복지태도의 3요소

요소	세부내용
복지실천의지	·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
복지책임주체인식	·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 복지의 국가책임 정도
복지기능의 효과성	· 사회복지기능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 · 긍정적 / 부정적 인식

복지실천의지는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이고, 복지책임주체 인식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요소이며, 복지기능의 효과성은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정도이다.

4) 복지태도의 유형과 특성

복지태도를 유형화하는 것은 복지태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태도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류진석, 2004).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지태도는 세금, 공적복지와 사적복지, 각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비용,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태도,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지지성, 복지공급의 책임주체, 복지재정의 확충 등 다양한 범위에서 개념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내포한 복지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효과, 가치, 신념, 태도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별, 시대별로 복지성향의 일정한 형태와 유형을 내포하고 있다.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는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복지태도는 여러 가지 기준 요소와 상이한 분석방법에 따라 다각적인 범주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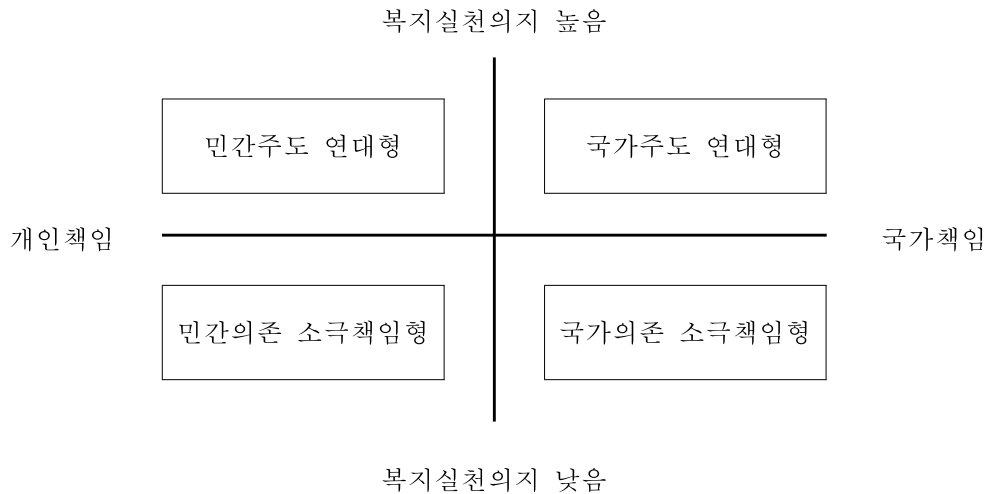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훈희·김운태(2011)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복지태도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보편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제2유형은 ‘선별적 복지·증세 반대형’, 제3유형은 ‘혼합적 복지·선별적 증세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인 보편적 복지·선별적 증세형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복지의 확대를 호의적으로 여기며, 전 국민의 세금인상보다는 부유층들의 조세 증세를 찬성하는 유형이다.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탈세를 방지하고 현재의 소득과 자산 조사에 대해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제2유형인 선별적 복지·증세 반대형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로 수용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다. 기본적으로

로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조세 증세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유형이다. 제3유형인 혼합적 복지·선별적 증세형은 복지 영역과 그 대상에 따라 찬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형이다(이훈희·김윤태, 2012).

복지태도의 유형을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한 최균·류진석(2000)은 복지책임의 주체와 실천의지가 그것이다. 복지책임주체는 복지비용부담이 개인에 있느냐 또는 국가에 있느냐에 따른 인식의 차원 즉, 복지공급의 주체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 및 욕구에 맞는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중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인식정도를 복지책임의 주체라고 하였다. 다른 요소인 복지실천의지는 객관적인 실제라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복지행동 성향을 의미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에 대한 확충과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수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또는 국가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복지비용부담에 따른 복지실천의지 차원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태도를 유형화 하였다[그림 3]. 네 가지 유형은 국가주도 연대형, 민간주도 연대형,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및 민간의존 소극책임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도 연대형은 국민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인식하며, 복지예산 확충을 지지하는 등 실천의지가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사적 복지책임주의 관점에 기초하기보다는 사회연대성 등에 기초한 집합주의적 관점을 가지며, 평등을 지향하고, 복지예산 확충을 받아들이는 등 수용성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민간주도 연대형은 복지의 책임주체면에서 개인 및 가족, 시장영역에서 책임지는 사적 복지책임 정책을 지지하며, 개인의 복지비용부담을 인정하는 복지실천에 대한 책임이 높은 유형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공적 책임보다는 민간책임 즉, 개인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주도보다는 사회주도적 연대성 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유형이다.



출처 : 최균·류진석. 2000.

[그림 3] 복지의식 유형 : 복지책임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

셋째, 국가의존 소극책임형은 복지책임면에서는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복지실천과 관련된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개인의 실천의지가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복지태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등을 지향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는 사회연대성의 원리는 적극적인 지지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비용부담 책임을 갖는 수용성은 낮으며, 비용부담에 대해 불확실한 제3자의 책임 하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복지유형이다.

넷째, 민간의존 소극책임형은 복지책임면에서 민간영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복지실천의지로 대리할 수 있는 복지재정 확충과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이 낮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국가의 책임보다는 사적영역의 주도적인 책임 하에, 사회적 위험 및 개인의 욕구에 대한 공공적인 책임의식보다는 개인책임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함을 선호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비용부담 보다는 개별적인 시장원리에 입각한 복지서비스의 활용 등을 지지하는 특성을 지닌 복지유형이다. 최균·류진석(2000)은 복지태도의 유형을 개인과 국가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복지재정의 부담이라는 복지실천의지라는 두 가

지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네 가지의 복지태도 유형을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실천의지, 복지기능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인식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복지태도를 범주화하고자 하였으며, 각 구성요소별 내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다. 복지책임주체는 집합주의적 관점에서 평등지향, 사회연대성의 원리 등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정도로 정의하였다. 복지책임주체의 역할분담은 역사적·사회경제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역동적 개입을 보여 왔으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 시장,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간의 구역설정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 세력화 과정 속에서 줄다리기 갈등이 진행되어왔다. 개인 선택의 자유,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는 사적 복지책임주의를 강조하지만, 평등, 연대성 등에 기반을 둔 집합주의는 공적 복지책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책임보다 국가나 정부의 공공복지책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협이나 개인의 욕구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보다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회변화 풍토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개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었을 때, 사회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태도의 유형화 기준인 복지실천의지는 복지재정 확충 복지비용의 수용성 및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참여 등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복지재정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정도를 복지실천의지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태도 유형화의 기준인 복지기능의 사회적 효과성은 복지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의 나태한 태도를 부추기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세 영역별 내용 수준을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한 후, 복지태도를 그 조합에 따라 모두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명칭은 <표 4>의 내용으로 명하였다.

복지태도의 유형은 각 영역별로 점수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한 것이 [그림 4]이다. 삼각형의 각 꼭짓점이 복지태도의 하위영역을 의미하며, 삼각형의 꼭지점 쪽에 근접할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은 것이다. 여덟 가지 유형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념형으로 청소년의 복지태도가 어떠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표 4> 복지태도의 유형 구분

구분		복지실천의지			
		높음		낮음	
복지책임주체(국가)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복지기능 효과성(공정)	높음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국가의존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낮음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

첫째, 국가주도 이타형은 복지실천의지가 높고 복지책임의 주체가 국가라고 인식하며 복지기능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의 원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기준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태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유문무, 2015). 이는 공공책임이 복지의 책임주체이면서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복지재정확충에 집합주의적 관점을 통해 평등지향,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지지하며 복지비용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타심을 발현하는 유형이다.

둘째, 민간주도 이타형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기능의 긍정적 효과성은 높으나, 복지책임의 주체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복지의 책임 주체면에서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시장 영역에서 책임지는 서비스를 선호하고 복지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면서 복지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형이다.

셋째, 국가의존 이타형은 복지책임 주체는 국가이며, 복지기능의 긍정적 효과

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복지재정 확충에는 낮은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복지책임이 개인 보다 국가가 주도적 책임을 지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기능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복지재정 확충에서는 실천의지가 낮게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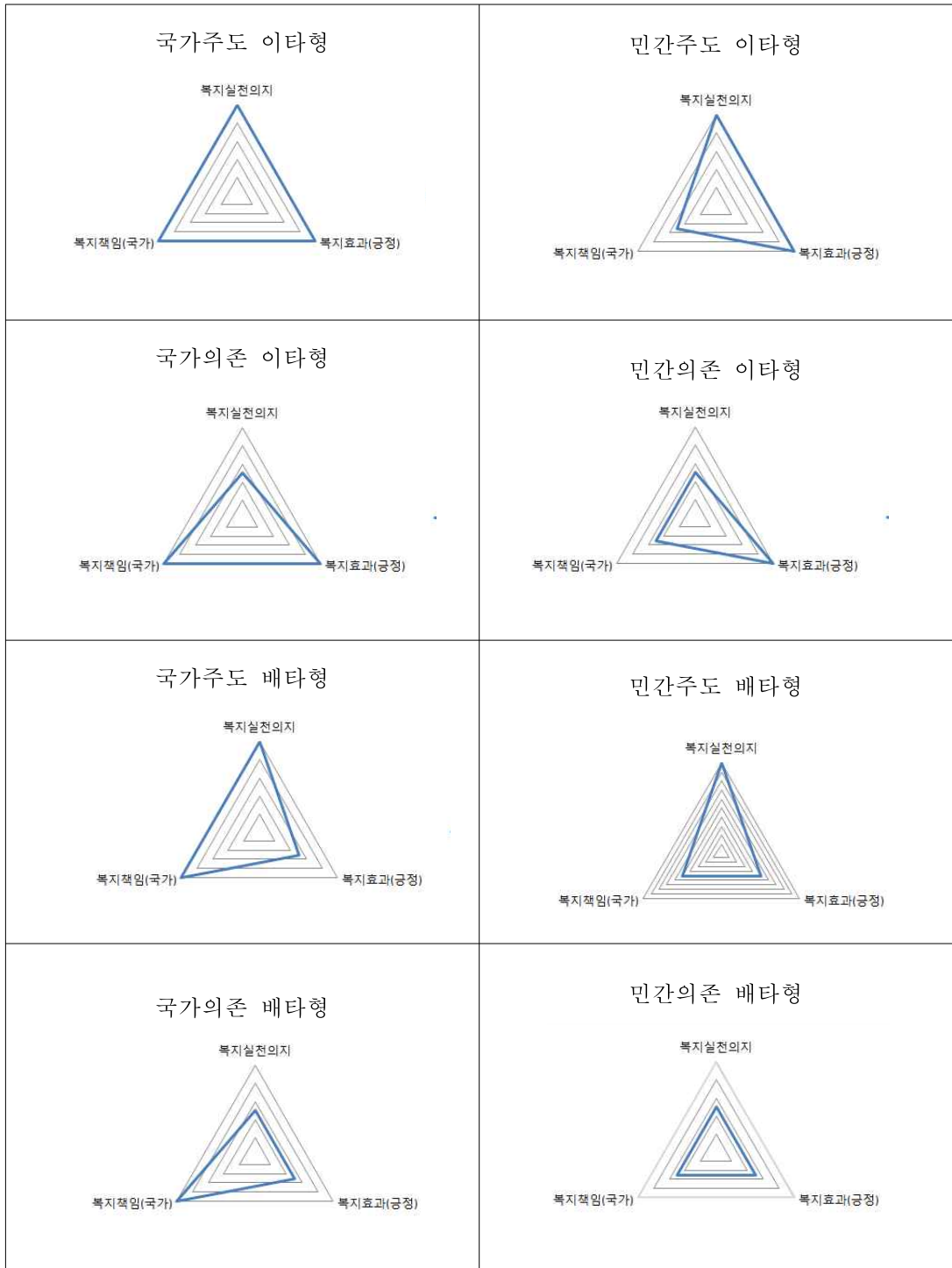
넷째, 민간의존 이타형은 복지기능의 긍정적 효과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 책임의 주체는 국가보다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복지실천 의지가 낮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개인, 가족, 시장영역의 역할을 중시하고 복지실천의지로 표명할 수 있는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인식은 낮은 유형이다. 국가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민간영역의 주도적 역할,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식보다는 개인책임에 입각하여 문제해결을 선호할 때 보다 복지기능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주도 배타형은 복지책임의 주체는 국가이며, 복지실천 의지도 높으나, 복지제도의 사회적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낮은 유형이다. 복지국가는 복지의 책임 주체 면에서 공공책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국가가 복지책임의 주체로서 복지재정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유형이다.

여섯째, 민간주도 배타형은 복지책임 주체가 국가이기 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보며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실천의지는 강하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복지책임의 주체 면에서 개인이 책임지는 서비스를 선호하며 개인의 비용부담의 수용도가 높은 유형으로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확대에는 낮은 지지를 보이며 복지기능 효과성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유형이다.

일곱째, 국가의존 배타형은 복지책임의 주체는 국가에게 있으며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낮은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는 유형으로 복지기능 효과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유형은 복지책임의 주체를 정부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확대는 낮은 지지를 보이며 복지기능

효과성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유형이다.



[그림 4] 복지태도의 유형별 점수 분포

여덟째, 민간의존 배타형은 복지책임의 주체는 개인에게 있으며 복지제도 실시를 위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실천의지가 약하며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효과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복지책임 주체의 민간영역의 역할을 중시하고 복지실천의지로 대리할 수 있는 복지재정 확충의 수용성도 낮은 유형이며, 복지서비스 효과성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덟 가지 복지태도의 유형들은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각 유형별로 부족한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교육 역시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태도의 유형은 복지책임 주체는 국가이며, 복지재정 확충에 실천의지가 높고 복지기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주도 이타형이다. 실제로는 국가주도 이타형보다 다른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관심사 중 하나는 특정한 구성요소에 낮은 점수를 가지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성별, 학교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인권의식 및 대중매체 노출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복지태도를 억제할 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요인의 성격에 따라 복지태도 중 복지책임의 주체, 실천의지, 복지기능의 효과성 중 특정 세부요인에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복지제도와 구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지형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유추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영순·여유진, 2011). 동시에 향후 복지국가의 ‘자연발생적 경로’를 추정케 하며 우리 사회의 현 위치와 미래 전망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2. 독립변수

1) 인권의식

(1) 인권의식의 개념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³⁾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권리를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⁴⁾. 인권은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만족되어야 할 삶의 필수요건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으며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인간은 대상 또는 목표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다. 어떤 협약이나 선포의 서두에 보면 “인간은” 또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로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의 주체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인권이란 말 내면의 의미는 주체개념과 주체로서 지니는 권리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인권은 단순히 법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며, 인간의 권리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로 사람의 사람다움을 구현할 권리인 것이다. 이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당하게 보려는 인간관이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사람이 목적이고 가치의 근간이며 사람의 사람다움이 최고의 가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구정화, 2009; 박상준·임태승, 2010).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일부 영역에서 성인들의 보호가 이

3) 인권이 인간의 문제라고 볼 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질문에 대해 로티(Richard Rorty)는 인간과 짐승의 구별, 어른과 아이의 구별, 남성과 여성의 구별로 짐승과 아이, 여성이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공통분모를 이성으로 보고 이성에 기초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치매나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상자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4) 세계인권선언 제1조

루어져야 하지만 그들 역시 인권의 주체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누려야 할 권리를 자세히 가르쳐서 인권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주는 것이 성인, 교사의 역할이다. 단순히 책을 통해서 인권을 배우는 것은 교육 효과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을 통한 교육적 환경이 책을 통해서 배운 내용과 부합될 때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국가인원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2008). 성인이 인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성인 자신이 인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길일 뿐 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인권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모델로서 역할을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양인숙, 2006).

가치로서의 인권은 이상이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는 일반적이면서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등이 바로 인간의 소망을 나타내는 가치로 그 사회·문화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말은 인간 생명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이 녹아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이란 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나의 권리는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해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굳건해야 한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나이, 경제력 등의 외부 조건 같은 그 모든 여건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모든 법적,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실현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김상미·남진열, 2014).

그러나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나 가정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부 교사나 부모들이 학생의 소망과 존엄성에 대한 의견을 자주 묵살하며, 이는 학생을 위한 일이라는 논지로 여러 가지 지시와 명령을 정당화한다. 이는 학생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수혜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내걸어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구나 어떠한 조건에도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권리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그 자체가 존엄성이며 권리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나가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혜원, 2008). 교사나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청소년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발달 단계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 그 자체를 수용하며 청소년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성인들의 인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며 그들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하나의 인격체로 수용하고 인권의 가치를 먼저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한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면 밖으로부터 강제로 자유를 제한되는 경우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란 여러 가지 횡포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이나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인간이 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지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란 이름으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는 타인의 자유도 인정하고, 보장해주며, 침해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자유만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것을 향유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실행할 능력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담긴 적극적 자유가 있다(김비환 외, 2011; 김기수·조무남, 1999). 적극적 자유에의 의지는 인간의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해 가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만이 아니라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의 의사와 행동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내재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상과 종교·양심의 자유,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인권 항목 중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

유, 통신의 자유 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1항). 자유란 단순히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때 그 의미 있고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에게 연령과 정신적인 미성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따르기만 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한다면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실현의 교육현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인권존중의 행동이 습관화된다면 가까운 우리 미래는 희망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신분과 차이,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하나 현실 속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나 소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 자체의 가치를 상하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며 법률상의 권리 또한 평등이다(구정화 외, 2007; 김성수·이종춘, 2014; 김자영, 2012).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법률로서 보장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제도도 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출발점에서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줌으로써 각자가 지닌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방법이다.

마이클 샌델(2010)에 의하면, 우리사회에는 아직 다양한 약자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을 평등한 상태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차등의 원칙이 존재한다(이창신 재인용, 2010). 이는 차별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평등을 향한 당연한 노력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상대적 배려로 수용해야 한다.

인권은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은 미약하여 그들의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없는 입장

이다. 그래서 저 마다의 조건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기회를 얻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실현은 필수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에는 평등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차별받지 말아야 할 권리라고 명시하면서 평등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별, 출신, 재산, 능력,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유형의 차별 없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받고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하여야 함을 통해 차별방지를 강조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신분이나 활동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차별에 대한 조항 이외에 협약에 명시된 다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학생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자유나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약속인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인권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에서 생명이라 함은 단순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명 중심의 정신이 담겨 있다.

(2) 인권의식의 내용

사람은 능력이나 기타 외적인 제반 조건에 상관없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평등하게 대접 받아야 하고 자신의 자발적 합의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누구나 생계 문제나 의료 문제, 사형제도, 낙태, 성폭력과 성폭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청소년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 청소년의 생존과 성장,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면역을 포함한 예방 조치의 보장과 영양과 위생,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성폭력이나 생태파괴 등 다양한 사

회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인권에 대한 시각은 시대와 맥락, 문화나 종교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인권의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는 공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인권운동사랑방인권교육실, 1999). 인권에 대한 보편적·공통적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의 일곱가지와 같다.

첫째, 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본’이나 ‘필수’라는 단어는 거기서 다른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혹은 최후의 담보로써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답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인권을 학습해서 익혀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의식 함양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바로 형성 가능한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생활 속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장기적인 성격을 띠는 정신적인 산물이다.

둘째,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달리 취급된다면 인권이라 말할 수 없다. 피부색이나 성별, 재산, 나이 등 그 모든 조건을 떠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기에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청소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인권의 보편성을 즐기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강순원, 2000).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올바른 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보편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시킬 의무가 있다.

셋째, 인권은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본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국가인권위원회, 2004) 보편적 권리와 대립되어 이해되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큰 명목과 힘을 갖는다. 힘없고 경제력도 없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권을 누리며 성장한 청소년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권의식이 함양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지국가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공교육에서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병행된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소망하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넷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법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지만 맥락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담아낼 수 없으며 가끔은 인권을 억압하는 부정적 장치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개 있으나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어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권 교육을 통해 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바로 잡고 인권의식을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현영렬, 2009).

다섯째, 인권은 상호불가분성을 갖고 있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공포나 억압’, ‘두려움’과 ‘열등감’ 등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며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 또한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교육에 대한 권리와 여가에 대한 권리, 문화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평등으로 구체화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자유와 평등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며 자유 없는 평등도 평등 없는 자유도 인간의 존엄을 가져올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학교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이념이다. 현재의 학교교육은 행복한 시민을 양성하기 보다는 교육적 경쟁 속에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양희규, 2001).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누릴 수 있는 여가와 문화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제도 및 교육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권은 책임을 동반하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볼 때,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인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타인의 권리도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일곱째,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며,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가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인권이 더 풍부하게 되었으며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활력이 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더 즐겁고,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절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적합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의 보편성은 각 사회가 갖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항목은 무수히 많으며, 이러한 보편적 인권은 다름 아닌 ‘다차원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혹은 국제법이 승인하는 인권의 카테고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소수자·약자 집단의 권리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3) 인권의식의 구성

인권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완성된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발전되고 있다. 인권의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시대적, 상황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어떤 하나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을 시작하여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구성되어 인류가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인 규약을 정하였다.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제인권 관련 조약의 근본으로서 법적 신념(opinion juries)을 획득하였으며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권규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인권법발간위원회, 2007; Donnelly, 2003). 하지만 그 형태가 ‘선언’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Vasak, 1982).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가 의무화할 수 있는 국제

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모두가 추구할 인권의 근거기준을 제시하였다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인권 실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규약은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만들던 초기에는 시민·정치적 권리는 규약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부가적 문서로 다루고자 하였으나, 제5차 유엔 총회에서 사회권과 시민권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조약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규약 안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6차 총회에서 이 문제를 재심의한 결과,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성격이 전혀 다르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경우 국가에 따른 발전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권리를 분리하여 각각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7). 각 규약에 해당하는 인권의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목록 분류

주분류	하위분류	내용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신체보존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예제도 및 매매금지, 법적 인격체로서의 인정,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 보호 및 국적 변경에 대한 권리	제1~6조, 15조
	법집행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절차와 법 심리에 대한 권리로서 법 앞의 평등권, 인신보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법률 소급 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7~11조
	시민적 자유권	삶의 특정 부분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	제18조~20조
	정치적 권리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국가 업무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여러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간접	제19~21조

주분류	하위분류	내용	세계인권선언
		적으로 참여할 권리	
사회적 권리	생존의 최소 필요 충족권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제25조
	경제적 권리	본원적 생명활동의 하나인 노동행위에 대한 자유와 공정한 노동조건 및 보수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에 대한 권리,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권 등	제22~24조
	사회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가정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 가정을 형성할 자유에 대한 보호, 부당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아발전의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 사생활보호권, 가족형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제2, 12, 16, 26조
	문화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문화 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	제27조

출처 : 이봉철. 2001

인권에 관한 흐름은 자유에서 평등으로, 평등도 기본적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으로 확장되어 변화하고 있다. Vasak(1982)은 인권의 개념을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박애와 연결지어 다음과 같이 3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박홍규 재인용, 1986; 문미희, 2005).

제1세대 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자유와 권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되었던 것은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였고, 평등의 개념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린다는 소극적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논리의 무한한 확장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 질병, 열악한 노동환경, 평균 수명의 저하, 문맹,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왔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주의 사상을 일정부분 인정한 형태의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

적 약자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보장되게 된 것이다(김자영, 2012).

제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노동의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집단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존의 인권 개념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남성·자본가 계급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식이 성장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 제3세대 인권이 등장하였다.

제3세대 인권은 집단권 또는 연대권이라고 불리는데, 소수자, 약자 집단의 특징을 인지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권만이 진정 공정하고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것이다(김자영, 2012). 제3세대 인권은 기존의 제1세대, 제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이자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Vasak(1982)의 논의와 유사하게 Marshall(1963)도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세 가지 권리의 발달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는 자유권(Civil Rights)⁵⁾, 19세기에는 정치권(Political Rights), 20세기에는 사회권(Social Rights)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권리의 책임에 대한 구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권리들을 의미한다(Marshall, 1963). 19세기의 정치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유재산 강조로 인한 사회 불평등의 요인을 보완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분배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정치권은 국가에 대한 요구의 기반을 제공했으며, 기존의 기회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평등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평등사상에 관한 논의가 확장 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20세기의 사회권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5) 우리나라에서는 Civil Rights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사회학자들과 헌법학자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권’ 혹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지칭하고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적에서는 ‘공민권’으로 지칭하고 있다(김형식, 1998: 46).

의미한다. 이 권리는 자유권과 정치권을 근거로 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보다 더 적극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국가를 인정한다. 사회권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여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시민은 세 가지 권리가 모두 갖춰질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Vasak의 3세대 인권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아닌 연대권인 반면, Marshall의 사회권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인권의 식은 추상적인 인권 개념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연계된 구체적인 인권 개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관련 이슈들을 크게 세 가지 즉, 제1세대 인권(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정치효능감

(1) 정치효능감의 개념

정치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적 접근에서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심리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삶은 이러한 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유도된다(김병년, 2008). 정치학과 심리학의 연구자들은 개인의 믿음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으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정치와 교육에 관한 이론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었다(박상호, 2005).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정치효능감은 개개인의 정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더욱 중요하다(김요셉·김성천·유서구, 2011). 정치효능감 또는 정치적 자기효능감

은 정치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정치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효능감을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정치체제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믿음 또는 신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Craig & Maggiotto, 1982; Mcpherson, Miller, Welch, & Clark, 1977; Morrell, 2003; Pollok, 1983; 최정화, 2012 재인용). 정치효능감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2개의 차원으로 구분되면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2) 정치효능감의 구성요소

정치효능감은 크게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서 어느 정도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요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가 반응할 것이라는 정부 반응성에 대한 신념으로 보았다(박가나, 2014).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외부 정치체제의 반응성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나 정치 및 정책가, 공무원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는 인식의 정도이다(박영신·김의철·민병기, 2002; 박상호, 2005). 정치참여자들이 정부나 정치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여주었을 때,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변화가 있었을 때 정치효능감은 강화된다(송효진, 2010).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진 시민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요성과 정부의 반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꼭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가상준, 2007).

정치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종원·이종혁(2008)은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낮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는 사람들에 비해 정치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윤영진·김의철·박영신(2003)은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세대별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부모보다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김묘성·김의철·박영신(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이며, 부모가 청소년보다 어려움에 대한 극복 효능감과 사회성 효능감은 더 높았으나, 정치효능감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았고, 사회비판적, 냉소주의적 의식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박성준·김주일, 2015). 이를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해석하면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긍정적 복지태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여도는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하였다. 정치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하고 투표를 통해 정부에 대한 당위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와 공공기관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송종길·박상호, 2010).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 미선양 사건은 촛불시위로 확산되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 했던 어린 청소년들과 20대의 젊은층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치효능감은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박성준·김주일, 2015). 이는 정치효능감이 정치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절대적인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해서도 안 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발 나서기 위한 걸음으로서 정치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해 볼만한 주제라고 여겨진다.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각 지역의 시민들의 지역정치의 참여가 매우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화합을 통한 민주주의를 이루려하는 개혁정치의 시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민주주의 제도와 그 제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의 정치의식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모든 국민이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민주적 정치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청소년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대중매체 이용경험

(1) 대중매체의 개념

대중매체(Mass media)는 흔히 대중영상매체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상은 일반적으로 영상, 심상 등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영상이라고 하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때론 시각적 요소에 한정하여 음향적 요소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의 요소도 모두 영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운드와 영상의 구분은 편의상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유상미, 2009). 또한 대중매체는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를 이어주는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뉴미디어 등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하여 불특정의 모든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강내원, 2004). 오늘날 TV나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는 사회적 영향력 논의에서 늘 중심에 있다. 영상매체가 다루는 주제는 인간이 인지하는 세계의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매체의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영상매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발달해왔는데, 과거에는 지상파 방송, 영화에 한정되었지만 TV, 위성방송, DMB, IPTV 등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영상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상매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영상매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결국 현대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정태환, 2005).

(2) 청소년기의 대중매체

오늘날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대중매체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중매체는 사회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의 패턴과 사고 체계 및 성격 변화에 큰 몫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는 특히 새로운 자극에 대해 선택의 억제력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대중매체 경험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정태환, 20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관점들이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혼돈된 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중매체가 개인의 태도형성에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이제 우리들의 가치관 형성에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외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대중매체를 접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변화의 정도는 매체이용의 형태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청소년이 성장해 감에 따라 시각적인 것에서 인쇄물 형태로 변화하고 개인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관심이 변화하게 된다(서선진, 2006). 대중매체는 인간생활과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효과적인 경험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대중적으로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의견, 태도,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유태영, 1983). 대중매체가 사회의 구조 또는 풍토에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경우, 교육·문화·경제·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청소년들이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3) 대중매체의 기능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역할이 공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준기, 2011). 대중매체가 청소년기에 제공하는 순기능이다. 첫째, 대중매체는 청소년 세대에 학습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사나 책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기 위해 교사나 부모가 올바르게 지도한다면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기능이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둘째, 대중매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형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장소, 사건 및 인간의 상호작용의 예들을 체험하게 한다.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사회 간접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한 예측과 예견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 및 사회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타인의 지위에 따르는 역할 행동을 간접적으로 체득하게 한다. 이 기능은 대중매체의 사회 교육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사회가 여러 특화된 분야로 나누어지고 정보의 고속 전달과 동시전달이 가능해지는 전문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구축됨으로써 학교 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대중매체는 청소년 개인에게는 동일시 대상으로서의 모델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맞는 역할과 행동, 가치관을 습득케 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은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 등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도록 모방의 기능을 촉진시켜 준다. 넷째,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향유할 문화형태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들에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기분을 전환케 하는 등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입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하기 쉬운데, 대중매체가 전달해 주는 다양한 오락프로그램은 이들에게 기분전환과 동시에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대중매체는 청소년기의 청소년 문화로서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대중매체를 즐길 수 있도록 성인들의 믿음과 배려가 요구된다.

대중매체는 순기능적 역할과 동시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재현할 수 있다. 첫째,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을 대리학습의 방관자로서 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 머무르게 하여 정보처리 수행능력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립심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활자매체가 대중매체에 그 우선순위를 물려주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독서율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김규, 1989). 둘째, 대중매체는 청소년

들의 폭력과 공격성향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한 청소년기는 대중매체를 받아들이면서 부적절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대중매체가 제공해주는 유행을 쉽게 수용하고 매체에서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건전치 못할 때는 더욱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의 습관적 남용이 인간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근거로 밝혀지고 있는데, 뇌파를 변이시키고 눈의 운동을 마비시킨다. 대중매체는 중추신경계통을 흥분시키거나 감각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극초단파의 방사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도적이지 못한 소비성향을 체득하고 과시적인 문화양식을 받아들일게 된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화면, 자극적인 효과음과 애니메이션 기법 등의 사용, 인기 연예인의 출연 등을 통하여 시청자를 설득하는 이 영향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기업들의 판매 전략안에서 철저하게 기능하고 있다. 다섯째,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허구적이고 상상적인 세계에서 야기되는 도피적 욕구를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의 지나친 오락적 기능에 빠져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상실되는 측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웅들이나 스타의식은 청소년에게 대리참여의 동질적인 전환에서 비롯되어지는 긍정적인 기능을 압도시킨다. 저급한 문화양식의 유포와 확산을 조장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문화이자 생활필수품인 대중매체에서 습득되는 가치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위해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3. 선행 연구 고찰

복지태도의 분석은 대부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나 복지프로

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감에 대한 의향을 묻는 문항을 통해 분석되는 경향을 보인다(Svallfors, 1995; Taylor-Gooby, 2001; 전주현, 2013 재인용).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⁶⁾에서는 국민들의 복지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실업, 교육, 연금, 의료정책 등 총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의 정도와 재정지출 정도를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기능 및 유형에 대한 태도를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복지태도를 분석한 연구(이인재, 1998; Blekesaune, 2006; 허만형, 2009), 복지책임의 주체와 복지비용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Goerrer, 2007; Koster, 2008; 백정미 외, 2008; 이중섭, 2009; 김신영, 2009; 김영순·여유진, 2011)가 있으며, 복지태도의 네 영역⁷⁾ 중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한 단일차원의 연구(이성균, 2002; Cybelle, 2004; Kosster, 2008; 백정미 외, 2008; 류만희·최영, 2009), 2개 이상의 영역을 살펴본 다차원의 연구(안치민, 1995; 이인재, 1998; 김희자, 1999; 조돈문, 2001; Blekesaune, 2006; 이중섭, 2009; 김영순·여유진, 2011) 등이 있다.

1) 복지태도의 다차원적 관점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단일차원으로 한정된 연구보다 다차원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 책임의 주체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복지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희자, 1999; 백정미 외, 2008). 사회복지의 기능적 측면에서 효과성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를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박성준·김주일, 2015). 그리고 실천의지에서 세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실천의지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복지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용을 늘려

6)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은 회원국 공통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 간 설문조사를 말하며, 7개 가량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수행함.

7) 복지태도를 복지유형(보편적복지&선별적복지), 복지기능(긍정적효과&부정적효과), 복지책임의 주체(개인&정부), 복지비용(복지재정 확충의 긍정적&부정적태도)의 네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할 수 있다(전주현, 2013).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중섭,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서비스 영역별 정부의 공적 책임의식을 묻는 문항을 통해 복지영역별 정부의 책임도를 분석(이인재, 1998; Svallfors, 1995, 2003)하거나 혹은 이들의 차원을 줄이거나 단일변수화 하여 복지태도라고 명명한 연구들(김신영, 2010; 이성균, 2002, Blekesune, 2006; Blekesaune and Quadagno, 2003)이 있다. 복지 책임주체의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는 사적복지와 공적복지에 대한 지지 즉, 사회복지의 주된 책임을 개인에 둘 것인지 국가에 둘 것인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복지태도를 분석한 연구(Kosster, 2008; 조돈문, 2001)와 복지민영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연구(안치민, 1995)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복지태도 분석에 있어 복지비용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묻는 문항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별 정부재정 증감에 대한 태도와 의향을 묻는 연구(이중섭, 2009; Goerrer, 2007; Cybelle, 2004; 류만희·최영, 2009),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 증가에 대한 태도를 묻는 연구(이인재, 1998)가 있으며, 국가의 복지재정 증가에 대한 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묻는 연구(안치민, 1995; 조돈문, 2001; Svallfors, 2004) 등이 있다.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 경험적 연구의 흐름은 집단 간 복지태도 분화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로 변화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진행되어진 국내의 복지태도 연구동향을 살펴본 변미희(2002)에 의하면 해당 문헌이 발표된 2002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의식을 키워드로 하여 발간된 연구들 중 약 65%가 1990년대에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집단대상, 특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태도 조사 연구가 가장 많음이 확인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김영모, 1980, 1985; 김상균·정원오, 1995; 최균·류진석, 2000; 우아영, 2000),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지역수준의 연구(김영란, 1995; 이인재, 1998) 등이 있다. 2000년대 까지 복지태도 연구의 특징은 주로 대학생, 사회복지사, 정책행정가, 종교인과 같은 특정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변미희, 2002). 초기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별 복지태도의 경향성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반의 복지태

도에 대한 시대별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복지태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급·계층과 복지태도에의 피상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단순히 복지태도의 외적 현상이나 양태를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들 동향을 살펴보면 집단별 혹은 특정 집단을 지목하여 복지태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아가 한국사회 복지태도의 분화양상이나 결정요인 등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 사회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경향이 집단별 복지태도 차이에서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변인으로서 계급, 자기 이해적 요인, 이념적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토대의 차이가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급결정론에 근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서구사회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강력한 친복지적 태도에 기반을 둔 계급별 복지태도의 분화를 보였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계급이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전주현, 2013). 이러한 외국의 실증적 결과들이 국내의 복지태도 연구에 있어서도 계급 중심적 연구의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전주현, 2013). 한국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있어 계급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김희자, 1999;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 조돈문(2001)과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는 자본가계급은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빈민과 실업자 대상의 복지에 대해서는 낮은 복지태도를 보였다. 결과는 여타의 계급과 복지태도의 차이가 일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해당 연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급 간 유의미한 복지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된다(이성균, 2002). 김영순·여유진(2011)은 한국 복지태도의 비계급적 특성이라고 명명하고 복지비용에 대한 태도에서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달리 계급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

에 있어서도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달리 오히려 상층계급으로 갈수록 높은 복지태도를 보이고 노동계급은 낮은 복지태도를 보이는 특징적 경향이 관련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 김신영(2009)은 과거 복지태도 결정요인 연구들이 지나치게 경제적 변수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의식의 자유로운 작동 가능성을 전제로 사회적 신뢰라는 변수가 복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감은 복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들 중, 자기이해(self-interest)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이중섭, 2009: 전주현, 2013 재인용). 자기이해관계는 사회학, 경제학과 같은 여러 학문에서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개인은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바라며 집단적 이익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행위의 근거를 개인 이익추구의 연장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정책지지에 있어서 개인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을 주요한 고려대상으로 보았다(Lipsmeyer & Nordstrom, 2003: 전주현, 2013에서 재인용).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자기이해 이론은 복지제도와 결부된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자기이해관계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는 복지에 대한 기여와 수급 혹은 수혜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복지는 혜택 제공의 범위에 따라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복지정책 실행을 위한 주된 자원인 세금의 징수는 소득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지 기여자와 복지 수혜자로 나눌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자기이해론에서는 이러한 복지지위에 따른 이해관계와 복지수혜가능성이 복지태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차이로 유발되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성별에

따른 복지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공복지재정 부담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주은선·백정미, 2007; 전주현, 2013),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2002). 연령변수인 경우, 나이가 젊을수록 실업위험성, 저축부족 등으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며, 퇴직노인이나 고령자일수록 복지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Kluegel & Miyano, 1995)가 있다. 국내의 연구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거나(양옥경, 2002),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태도를 지지하는 등 (주은선·백정미, 2007)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이 지향하는 가치가 복지태도, 그 중에서도 노후생활의 책임에 대해 성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신영, 2009).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Muuri, 2009; 전주현, 2013). 이는 교육이 사회적 가치관을 새롭게 학습하고 전승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친복지적인 태도와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복지는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성향과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대의식과 욕구, 평등주의적 원칙과 같은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높은 복지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안치민, 1995).

마지막으로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나 평등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 정당선호 등과 같이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특정한 가치관이 복지태도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Kosster, 2008; 이중섭, 2009; 이한나·이미라, 2010). 이준용(2015)은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체계로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그가 사용한 분배정의에 대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변인 중 평등은 인권의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비추어 볼 때, 인권의식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가치관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에서 정치적 성향 및 가치관 측정방식의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결과들은 주로 우파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보수적 이념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보다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이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었다. 반편등주의(non-egalitarian)보다 평등주의(egalitarian)적 관점의 집단이, 이기주의적 가치보다 이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집단이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Lipsmeyer & Nordstrom, 2003; Blekesaune & Quadagno, 2003; 이중섭, 2009; 주은선·백정미, 2007; 전주현, 2013).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하위변인을 복지기능, 복지책임 및 복지비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연구하였다. 복지기능은 복지기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로서 복지제도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역기능을 하는지라는 양극단의 관점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하였다. 복지제도가 노동에의 의욕을 꺾고 빈곤층의 나태함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지, 아니면 빈부격차의 해소와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등을 도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류지현·허창영, 2008; 류진석, 2004). 다음으로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태도로 복지를 주되게 공급하는 주체가 국가라고 인식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비용에 대한 태도로서 정부의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인식으로써, 복지의 실천적 지향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복지실천 의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중 인권의식과 복지태도, 대중매체라는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박영숙(2004)은 청소년의 복지태도·인권의식의 실태와 영상매체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대중매체 시청과 사회의식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대중매체 시청이 인권의식과 복지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대중매체는 다양한 지식의 공급처임과 동시에 청소년 또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결속력을 높여주는 정보의 창구이며 모방의 대상이고, 가치판단의 근거이며 자신의 소망을 설정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청소년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들(이순영, 2002; 정태환, 2005; 강정현, 2010)을 살펴보면,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정치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비

용 및 복지기능의 정당성이라는 요소와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경험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PC 통신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때 대중매체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태도 또는 복지의식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영역에서의 청소년과 대중매체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경험한 매체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능력, 평가, 활동차원에서 모두 뉴스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김광웅·방은령, 2001). 이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대중매체는 정치·사회적 인식형성에 있어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립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복지태도는 개인의 경험이 집단적 형태를 띠며 시대적·역사적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정신적 산물이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대중매체 이용경험을 연구하였다.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 저변에 깔려 있는 인권의식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고유의 권리이며, 사회복지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 개인에서부터 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에 전문적·제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빈곤·차별·가족·질병·노동·교육·자유·학대·폭력 등 인권의 문제와 일맥상통 하는 영역이 많다(고명석, 2011; 김옥기, 2015 재인용).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 실천이 차별, 불평등, 빈곤과 기타 사회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인권에 관한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인권의식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통한 통찰력을 얻

게 된다고 본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인권의식과 복지태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변수 간의 영향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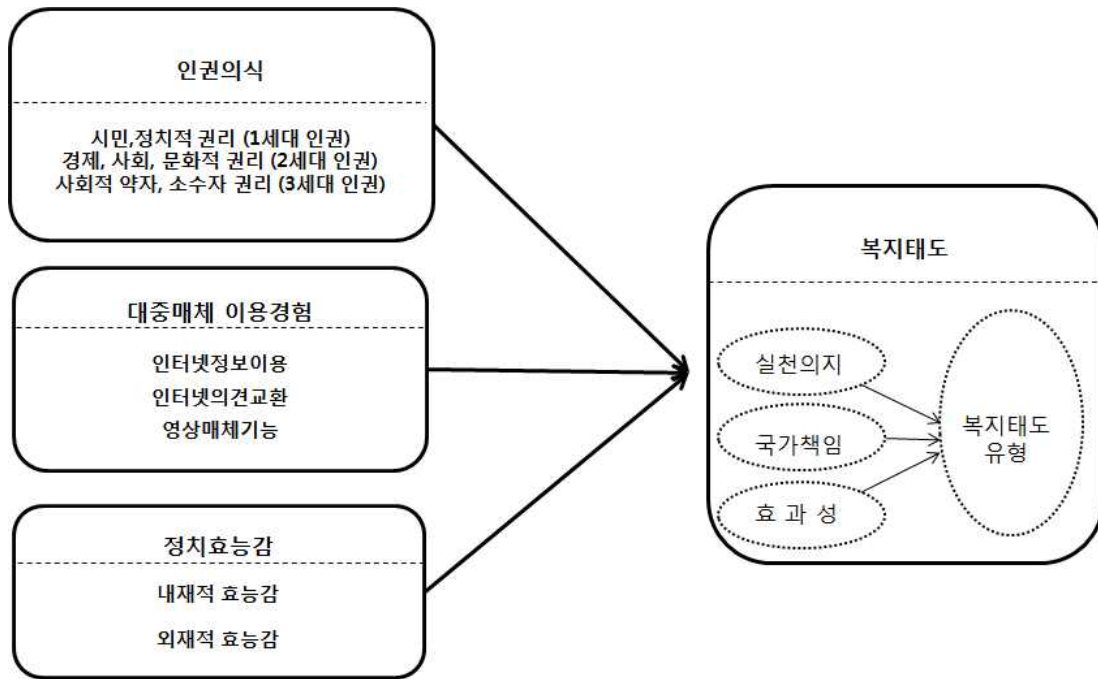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연구문제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5와 같은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분석틀은 청소년의 복지태도로서 복지책임주체, 복지실천의지, 복지기능의 효과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요인들을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 등으로 추출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은 청소년의 복지태도 수준에 관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복지태도 검사지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 분포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태도 뿐 아니라 복지책임 주체, 복지실천 의지, 복지기능의 효과성이라는 각각의 하위요소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복지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제변수 :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그림 6] 연구 분석의 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지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별, 학교급별 차이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총 3개 집단이다. 각 학교급별 약 360명씩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을 각각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reported survey)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중 1,0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69부를 제외한 1,001부를 코딩하였고, 표준점수 ± 3 보다 큰 값이 나온 경우, 극단치로

보고 전체 평균값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케이스 선택(Select cases)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97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6> 설문지 배포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중학교	남학교	30	30	30	90	
	여학교	30	30	30	90	
	남녀공학	남 30, 여 30	남 30, 여 30	남 30, 여 30	180	
	계	120	120	120	360	
고등학교	남학교	30	30	30	90	
	여학교	30	30	30	90	
	남녀공학	남 30, 여 30	남 30, 여 30	남 30, 여 30	180	
	계	120	120	120	360	
대학교	계	110	90	90	90	380
합계	110	90	90	90	1,100	

3. 연구 변인

본 연구의 측정변인은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은 사각회전 중 Direct oblimin회전⁸⁾으로 분석하였다. Direct oblimin은 사각회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요인적재값이 낮은 변수의 요인적재값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8) Direct oblimin은 Jennrich와 Sampson(1966)에 의해 개발된 사각회전 분석으로서 참조 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복지태도로, 최균·류진석(2000), 김영순·여유진(2015), 이준용(2015)이 사용한 복지태도 척도에서 발췌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는 국가의 복지책임 정도, 복지실천 의지, 복지기능 효과성 등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복지책임 주체는 국가라고 보는 인식의 정도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요소인 복지실천 의지는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경향으로서 개인의 주체적, 자발적 의지로 복지태도와 실천적 행위를 매개하는 복지행동 지향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복지예산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성 정도를 복지실천의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기능 효과성은 복지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의 나태한 태도를 조장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구성으로서, 복지책임 주체의 인식도는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정도와 관련된 질문 8문항, 복지실천 의지는 다양한 복지영역에 대한 재정확충에 대한 질문 8문항, 복지기능 효과성은 복지기능의 정당성과 관련된 질문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에 대한 질문은 국가의 복지책임 정도와 복지기능의 효과성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 복지실천의지 1점(훨씬 더 줄여야 한다)에서 5점(훨씬 늘여야 한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책임의 정도 7문항, 복지실천의지 6문항, 복지기능의 효과성 5문항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되어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복지태도의 세 하위변인 중 국가책임의 정도에 대한 변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 KMO검정은 .870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2433.825($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 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841이었다.

두 번째 변인인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검정은 .809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1357.347(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ch's a)는 .801이었다.

마지막으로 복지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655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514.359(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ch's a)는 .683이었다.

2) 독립변인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인 독립변인으로,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이용경험을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1) 인권의식

독립변인으로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일 미치는 변수로 예측되는 인권의식을 설정하였다.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일반 국민용 인권의식조사 설문,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Ⅲ, 김자영(2012), 배병룡(2011)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문항으로는 1세대 인권(시민·정치적 권리), 2세대 인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세대 인권(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으로 구성하였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질문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정치적 권리 6문항,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6문항,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5문항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되어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권의식의 세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를 요인 분석한 결과, KMO검정은 .607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297.484($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715이었다.

두 번째 변인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검정은 .610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330.151($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 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736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648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239.943($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602이었다.

(2)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크게 두 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분하며, 우선 자신의 정치효과성 혹은 자신감을 반영하는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체제의 반응성에 대한 일반 인식을 반영하는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나뉜다(강내원, 2004). 본 연구에서는 박종민 외(2001), 남인용·허일수(2012), 윤수찬(2013)의 연구를 기초로 내재적 정치효능감 6문항, 외재적 정치효능감 5문항, 총11문항을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배점을 부과하였다. 부정문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치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정치효능감은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서 내재적 정치효능감 4문항, 외재적 정치효능감 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내재적 정치효능감 관련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721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1497.657($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 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807이었다. 외재적 정치효능감 관련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731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1227.235($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간의 요인 분석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외재적 정치효능감의 신뢰도(Cronbach's

a)는 .846이었다.

(3) 대중매체 이용경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중매체 이용경험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강내원(2004), 최정화(2012), 이진희(2015)가 제작한 인터넷 및 대중매체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경험에 대한 척도는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주요 하위영역으로는 인터넷 정보 이용정도, 인터넷 의견교환정도, 영상매체의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대중매체의 이용경험을 측정한 인터넷 의견교환정도와 영상매체의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배점을 부과하였고, 인터넷 정보이용정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여 1점(전혀 보지 않는다)에서 5점(관심을 갖고 매우 자주 본다)의 배점으로 구성하였다.

대중매체 이용경험은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인터넷 정보이용정도 5문항, 인터넷 의견교환정도 4문항, 영상매체의 기능 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인터넷 정보이용정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661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1075.309(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 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ch's a)는 .716이었다. 인터넷 의견교환정도 관련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672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649.028(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간의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의견교환정도의 신뢰도(Cronbch's a)는 .673이었다.

영상매체의 기능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KMO검정은 .881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표본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3168.259(p=.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간의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영상매체 기능의 신뢰도(Cronbch's a)는 .870이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SPSS for Windows 20.0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한 뒤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될 주요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등을 검토하고, 빈도분석,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 간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위계적 회귀분석⁹⁾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자 하였다. 그리고 복지태도 유형별에 따른 분석은 목표변수가 이항형(binary-type)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변수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복지태도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인식 수준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복지태도의 하위 영역 별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나누어 교차분석을 통해 복지태도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넷째, 주요변수들의 관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섯째, 독립변인인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 등은 바람직한 복지태도 유형이 나타날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태도의 유형은 복지태도 점수와는 달리 명목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여러 독립변인들의 영향력

9)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ethod)은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들을 방정식에 첨가하는 것인데, 각 단계마다 결정계수(R^2)의 증가분과 회귀계수(b)의 변화 및 유의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배지연·김은이, 2003).

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명목변수로 구성되는 종속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복지태도의 유형에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인권의식을 비롯한 독립변인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태도의 하위영역인 복지책임의 주제, 복지의 효과성, 실천의지의 하위 변인별, 복지태도 전체 합산 점수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48	46.1	가정 소득	하	19	2.0
	여성	523	53.9		중하	120	12.4
	합계	971	100.0		중	550	56.6
중	1	99	10.2	중상	251	25.8	
	2	109	11.2	상	31	3.2	
	3	108	11.1	합계	971	100.0	
	계	316	32.5	양부모 모두 동거	807	83.1	
	1	118	12.2	부(父)와 동거	30	3.1	
학교 급별	2	117	12.0	부모 동거 여부	모(母)와 동거	78	8.0
	3	110	11.3	부모와 따로 동거	56	5.8	
	계	345	35.5	합계	971	100.0	
	1	103	10.6	하	49	5.0	
대	2	76	7.8	중하	158	16.3	
	3	90	9.3	중	387	39.9	
	4	41	4.2	중상	282	29.0	
	계	310	31.9	상	95	9.8	
	합계	971	100.0	합계	971	100.0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448명(46.1%), 여성 523명(53.9%)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으로는 중학생 316명(32.5%), 고등학생 345(35.5%), 대학생 310명(31.9%)이었다. 응답자의 가정소득을 살펴보면, 550명(56.6%)은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251명(25.8%)은 중상 정도의 가정형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양부모 모두와 동거 807명(83.1%), 모(母)와의 동거 78(8.0%), 부(父)와의 동거 30명(3.1%), 부모 모두와 따로 동거 56명(5.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업성적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하 49명(5.0%), 중하 158명(16.3%), 중 387명(39.9%), 중상 282명(29.0), 상 95명(9.8%)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복지태도, 인권의식, 대중매체이용 경험, 정치효능감)에 대한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복지태도는 총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책임(M=4.30), 효과성(M=3.88), 실천의지(M=3.87)의 모든 측면에서 보통이상의 복지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의식의 경우 시민·정치적 권리(M=4.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M=4.11),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M=4.35)의 모든 요인에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에서는 인터넷이용(M=3.01), 의견교환(M=3.62), 영상물 시청기능(M=3.47)의 모든 변인에서 보통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정치적효능감인 경우, 외재적 정치효능감(M=.400)은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재적 정치효능감(M=2.11)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971)

구분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복지 태도	국가책임	1.43	5.00	4.30	.52	-.65	.66
	효과성	3.00	5.00	3.88	.42	.23	-.22
	실천의지	1.50	5.00	3.87	.52	-.02	.27
인권 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3.17	4.92	4.10	.34	-.34	-.5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02	5.00	4.11	.36	-.28	-.26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3.00	5.00	4.35	.33	-.38	.32
대중매체 이용경험	인터넷이용	1.00	5.00	3.01	.67	0.5	.08
	의견교환	1.00	5.00	3.62	.72	-.42	.08
	영상물시청기능	1.00	5.00	3.47	.71	-.38	.08
정치 효능감	내재적	1.00	5.00	2.11	.87	.38	-.59
	외재적	1.00	5.00	4.00	.86	-.74	.30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양부모 동거여부, 학업성적에 따른 복지태도의 평균 비교결과는 <표 9>와 같다. 성별에 따른 복지태도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국가책임($t=-3.19,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M=4.34$)이 남성($M=4.24$)보다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복지기능의 효과성($t=-2.21, p<.0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M=3.90$)이 남성($M=3.84$)보다 복지 기능에 대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에 대한 실천의지($t=-.8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 2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준용(2014)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 및 지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급별에 따른 복지태도의 평균비교 결과는 복지기능의 효과성($F=10.3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M=3.94$)이 중학생($M=3.89$), 고등학생($M=3.80$)보다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정부에 대한 책임과 실천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가정소득에 따른 복지태도의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국가책임(F=6.52, p<.01), 복지기능의 효과성(F=3.14, p<.05), 실천의지(F=4.83,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M=4.43)이 다른 집단(중 M=4.27, 상 M=4.1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M=3.95)이 다른 집단(중 M=3.85, 상 M=3.88)보다 높았다. 또한 실천의지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M=3.92)이 다른 집단(중 M=3.86, 상 M=3.60)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에 따른 복지태도의 하위변인에서는 효과성(F=3.0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 성적이 중간인 집단(M=3.89)이 다른 집단(하위 집단 M=3.81, 상위 집단 M=3.86)에 비해 복지태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국가책임과 실천의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양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복지태도의 평균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평균비교

(N=971)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국가책임	남성	448	4.24	.55	-3.19**
		여성	523	4.34	.50	
	효과성	남성	448	3.84	.41	-2.21*
		여성	523	3.90	.41	
	실천의지	남성	448	3.85	.55	-.89
		여성	523	3.88	.50	
학교급별	국가책임	중학생	316	4.30	.58	.08
		고등학생	345	4.30	.51	
		대학생	310	4.28	.48	
		합계	971	4.30	.52	
	효과성	중학생	316	3.89	.47	10.30***
		고등학생	345	3.80	.40	
		대학생	310	3.94	.36	
		합계	971	3.87	.42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실천의지	중학생	316	3.92	.59	2.90	
		고등학생	345	3.82	.50		
		대학생	310	3.88	.47		
		합계	971	3.87	.52		
가정소득	국가책임	상	31	4.17	.62	6.52**	
		중	801	4.27	.52		
		하	139	4.43	.48		
		합계	971	4.29	.52		
	효과성	상	31	3.88	.44	3.14*	
		중	801	3.85	.41		
		하	139	3.95	.41		
	합계	상	31	3.60	.77	4.83**	
		중	801	3.86	.50		
		하	139	3.92	.52		
	양부모 동거	국가책임	양부모	807	4.29	.51	.38
			한부모	108	4.30	.56	
모두별거			56	4.23	.52		
합계			971	4.29	.52		
효과성		양부모	807	3.86	.41	.39	
		한부모	108	3.90	.43		
		모두별거	56	3.89	.38		
합계		양부모	807	3.85	.51	2.31	
		한부모	108	3.87	.54		
		모두별거	56	4.01	.59		
학업성적		국가책임	상	95	4.31	.56	1.85
			중	669	4.31	.49	
	하		207	4.23	.58		
	합계		971	4.29	.52		
	효과성	상	95	3.86	.41	3.04*	
		중	669	3.89	.40		
		하	207	3.81	.43		
	합계	상	95	3.78	.59	2.00	
		중	669	3.88	.50		
		하	207	3.83	.54		
	합계	상	95	3.86	.52		
		중	669	3.86	.52		
하		207	3.86	.52			

*p<.05, **p<.01, ***p<.001

3. 복지태도 유형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에 대한 구성요소를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 가지 하위 변인은 각각 독립변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하위변인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하위변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하위변인을 두 가지 하위변인을 조합한 2차원 분석, 세 가지 하위변인을 조합한 3차원 분석을 통하여 이 변인들 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복지태도의 1차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세 가지 구성요소 즉,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로 설정하여 독립변인들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변인의 평균 값(높/낮음)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N=971)

<표 10> 복지태도 구성요소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	%
국가책임	높음	508	52.3
	낮음	463	47.7
효과성	높음	523	53.6
	낮음	448	46.1
실천의지	높음	512	52.7
	낮음	459	47.3

(1) 국가책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국가책임이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국가책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

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의 하위 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대중매체 이용경험 하위 요인 중 인터넷 의견교환, 영상물 시청기능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국가책임이 될 가능성이 20.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국가책임이 될 가능성이 3.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견교환을 하는 집단은 국가책임이 될 가능성이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영상물 시청을 하는 집단은 국가책임이 될 가능성이 1.4배가 증가하였다.

<표 11> 국가책임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20.999	1.833	131.194	.000		
독립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229	.238	.919	.338	1.25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014	.288	109.507	.000***	20.359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254	.283	19.672	.000***	3.504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154	.125	1.508	.219	.858
		인터넷의견교환	.269	.123	4.773	.029*	1.308
		영상물 시청기능	.336	.120	7.813	.005**	1.400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121	.096	1.601	.206	.886
		외재적 효능감	.108	.094	1.332	.248	1.114
	통제변인	성별	.038	.163	.054	.817	1.039
학교급별		-.157	.102	2.382	.123	.855	
가정소득		.136	.201	.455	.500	1.146	
학업성적		.088	.153	.330	.566	1.092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1007.611 Model Chi-Square=336.395 df=12 p=.000

*p<.05, **p<.01, ***p<.001

(2)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효과성의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효과성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급별, 인권의식의 하위 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내재적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5.130	1.577	92.075	.000		
독립변인	인권	시민·정치적 권리	1.039	.224	21.628	.000***	2.828
	의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569	.246	40.825	.000***	4.804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394	.252	2.439	.118	1.483
	대중매체이용경험	인터넷 이용	.138	.114	1.447	.229	1.148
		인터넷의견교환	.155	.111	1.938	.164	1.168
		영상물 시청기능	.208	.109	3.656	.056	1.231
	정치효능감	내재적 효능감	-.215	.087	6.174	.013*	.806
		외재적 효능감	.011	.086	.017	.897	1.011
	통제변인	성별	.103	.149	.475	.491	1.108
		학교급별	.258	.093	7.634	.006**	1.294
가정소득		.167	.187	.799	.371	1.181	
학업성적		.087	.138	.395	.530	1.091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1161.893 Model Chi-Square=178.400 df=12 p=.000

*p<.05, **p<.01, ***p<.001

학교급별이 높은 집단은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1.3배로 증가하였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2.8배가 증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효과

성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4.8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1.2배가 증가하였다

(3)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복지태도에 대한 실천의지가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의 세 하위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실천의지가 높을 가능성이 1.8배가 증가하였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실천의지가 높을 가능성이 3.6배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실천의지가 높을 가능성이 2.0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2.172	1.467	68.870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585	.212	7.596	.006**	1.79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267	.231	30.221	.000***	3.551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699	.245	8.159	.004**	2.013
	대중매체 이용 경험					
	인터넷 이용	.028	.110	.064	.800	1.028
	인터넷의견교환	.103	.107	.923	.337	1.109
	영상물 시청기능	.197	.105	3.515	.061	1.218
	정치 효능감					
	내재적 효능감	.020	.084	.055	.815	1.020
외재적 효능감	.043	.083	.265	.606	1.044	
통제변인	성별	-.195	.144	1.835	.176	.823
	학교급별	-.121	.089	1.843	.175	.886
	가정소득	.101	.179	.318	.573	1.106
	학업성적	.174	.133	1.705	.192	1.190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1229.072 Model Chi-Square=114.126 df=12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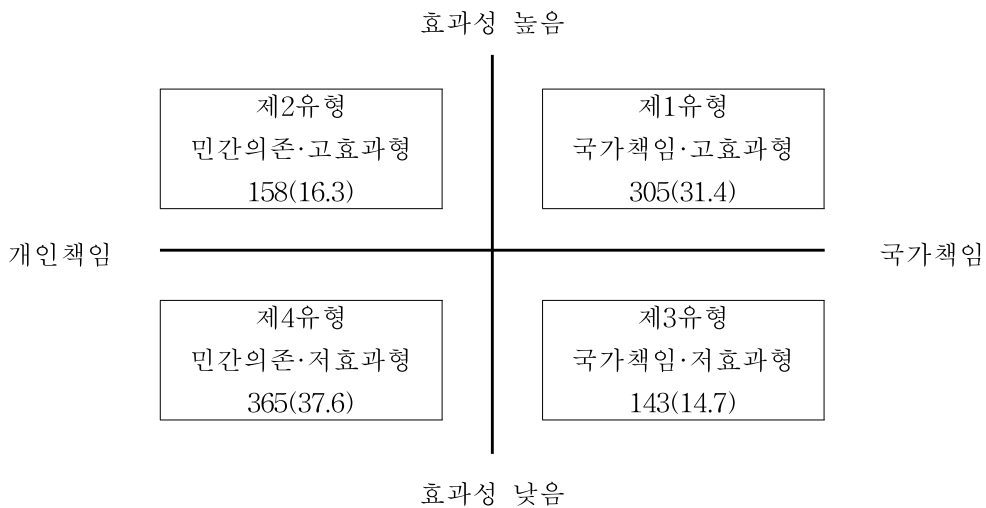
*p<.05, **p<.01, ***p<.001

2) 복지태도의 2차원 분석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각 두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각 요소의 평균값(높/낮음)을 조합한 2차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2개의 유형으로는 제1유형(국가책임·고효과성), 제2유형(민간의존·고효과형), 제3유형(민간의존·저효과형), 제4유형(국가책임·저효과형), 제5유형(국가책임·고실천의지형), 제6유형(민간의존·고실천의지형), 제7유형(국가책임·저실천의지형), 제8유형(민간의존·저실천의지형), 제9유형(고효과·고실천의지형), 제10유형(고효과·저실천의지형), 제11유형(고효과·저실천의지형), 제12유형(저효과·저실천의지형)으로 명명화 하였다.

(1) 국가책임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

복지태도의 하위요소 중 국가책임과 효과성의 평균값 높/낮음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4가지의 복지태도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면 [그림 6]과 같다. 제1유형은 국가책임·고효과형, 제2유형은 민간의존·고효과형, 제3유형은 국가책임·저효과형, 제4유형은 민간의존·저효과형으로 명명화하였다.



단위: 명(%)

[그림 6] 복지태도 유형 : 국가책임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제1유형을 기준으로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을 조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인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1유형과 제2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와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내재적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이 낮은 집단은 제2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5배가 증가하였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2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1.4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2유형 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3.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제2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3배가 증가하였다.

<표 14> 제1유형과 제2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4.169	2.710	27.346	.000	
독립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73	.385	.202	.653	1.18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30	.417	33.904	.000***	11.360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157	.421	7.551	.006**	3.181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185	.185	1.001	.317	.831
		인터넷의견교환	.038	.182	.043	.836	1.038
		영상물 시청기능	.340	.180	3.593	.058	1.405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293	.140	4.369	.037*	.746
외재적 효능감		-.009	.148	.004	.950	.991	
통제변인	성별	.124	.248	.248	.618	1.132	
	학교급별	-.410	.149	7.515	.006**	.664	
	가정소득	-.041	.282	.021	.884	.960	
	학업성적	-.206	.232	.788	.375	.814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441.609 Model Chi-Square=119.522 df=12 p=.000

*p<.05, **p<.01, ***p<.001

제1유형과 제3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내재적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3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4.1배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3유형 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2.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제3유형 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4배가 증가하였다.

<표 15> 제1유형과 제3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0.803	2.498	18.708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398	.340	16.910	.000***	4.04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899	.406	4.913	.027*	2.458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255	.402	.403	.526	1.291	
		대중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258	.169	2.340	.126	1.295
		인터넷의견교환	-.047	.171	.076	.782	.954	
		영상물 시청기능	.198	.160	1.533	.216	1.219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365	.123	8.813	.003**	.694	
		외재적 효능감	-.068	.129	.280	.597	.934	
	통제변인		성별	.202	.221	.829	.362	1.223
			학교급별	.125	.140	.795	.373	1.133
		가정소득	.108	.270	.161	.688	1.114	
		학업성적	-.198	.205	.940	.332	.820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536.452 Model Chi-Square=57.913 df=12 p=.000

*p<.05, **p<.01, ***p<.001

제1유형과 제4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세 하위변인과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의견교환, 영상물 시청기능, 정치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 내재적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4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2.7배 증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4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33.4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4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4.0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의견교환을 많이 하는 집단은 제4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5배, 부모와 영상물 시청을 함께 하는 집단은 제4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6배가 증가하였다.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제4유형보다 제1유형이 될 가능성이 1.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제1유형과 제4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28.610	2.600	121.100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984	.319	9.514	.002**	2.67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509	.383	83.944	.000***	33.424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1.395	.372	14.077	.000***	4.035
	대중매체 이용					
	인터넷 이용	-.087	.161	.290	.590	.917
	인터넷의견교환	.401	.160	6.314	.012*	1.494
	영상물 시청기능	.455	.161	7.933	.005**	1.576
	정치효능감					
	내재적 효능감	-.339	.129	6.905	.009**	.713
외재적 효능감	.103	.120	.737	.391	1.109	
통제변인	성별	.112	.216	.271	.603	1.119
	학교급별	.003	.136	.001	.980	1.003
	가정소득	.321	.274	1.377	.241	1.378
	학업성적	.219	.204	1.152	.283	1.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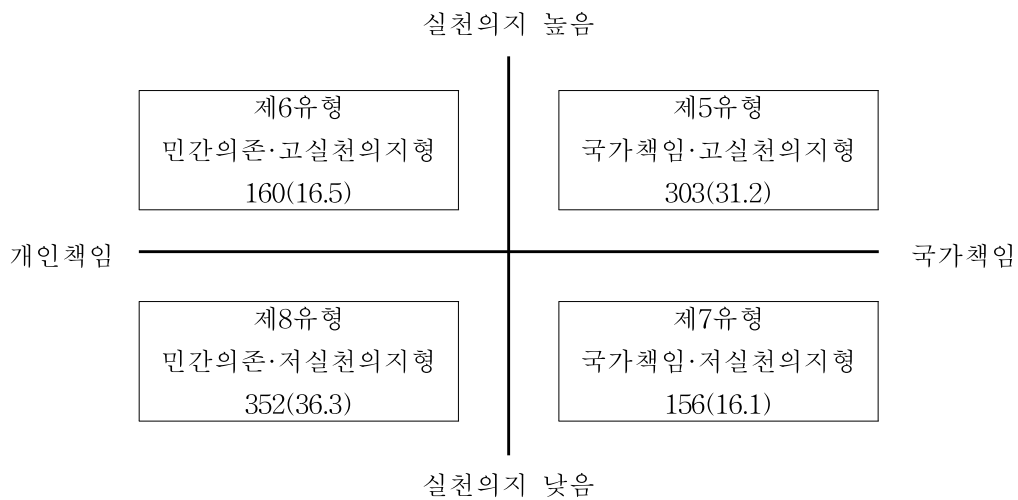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590.542 Model Chi-Square=332.895 df=12 p=.000

*p<.05, **p<.01, ***p<.001

(2) 국가책임과 실천의지에 대한 분석

복지태도의 하위요소 중 국가책임과 실천의지의 평균값 높/낮음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4가지의 복지태도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면 [그림 7]과 같다. 제5유형은 국가책임·고실천의지형, 제6유형은 민간의존·고실천의지형, 제7유형은 국가책임·저실천의지형, 제8유형은 민간의존·저실천의지형으로 명명화하였다.



단위: 명(%)

[그림 7] 복지태도 유형 : 국가책임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

제5유형을 기준으로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을 조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인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5유형과 제6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와 대중매체 이용경험의 하위변인 중 영상물 시청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6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22.1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6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4.8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함께 하는 집단은 제6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1.7배가 증가하였다.

<표 17> 제5유형과 제6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8.041	2.750	43.048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083	.392	.045	.833	1.08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094	.438	49.954	.000***	22.056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1.561	.433	12.966	.000***	4.763
		대중매체이용경험요인					
	인터넷 이용	-.489	.190	6.647	.010	.613	
	인터넷의견교환	-.103	.188	.301	.583	.902	
	영상물 시청기능	.550	.180	9.343	.002**	1.734	
	정치효능감요인	내재적 효능감	-.239	.141	2.891	.089	.787
외재적 효능감		.087	.142	.382	.537	1.091	
통제변인	성별	-.078	.249	.098	.754	.925	
	학교급별	-.034	.152	.050	.824	.967	
	가정소득	-.112	.312	.128	.721	.894	
	학업성적	-.400	.230	3.030	.082	.670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434.517 Model Chi-Square=153.874 df=12 p=.000

*p<.05, **p<.01, ***p<.001

제5유형과 제7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내재적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7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2.1배 증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7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3.4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7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2.3배가 증가하였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제7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1.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제5유형과 제7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0.147	2.423	17.534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717	.327	4.803	.028*	2.04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229	.395	9.673	.002**	3.417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832	.939	4.482	.034*	2.298
	대중매체이용경험요인					
	인터넷 이용	-.077	.164	.218	.640	.926
	인터넷의견교환	-.185	.169	1.199	.273	.831
	영상물 시청기능	.299	.155	3.710	.054	1.349
통제변인	정치효능감요인					
	내재적 효능감	.029	.124	.053	.818	1.029
	외재적 효능감	-.032	.124	.065	.799	.969
통제변인	성별	-.436	.220	3.952	.047*	.646
	학교급별	.007	.035	.002	.962	1.007
	가정소득	-.006	.264	.000	.983	.994
	학업성적	-.253	.202	4.568	.210	.776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557.778 Model Chi-Square=39.180 df=12 p=.000

*p<.05, **p<.01, ***p<.001

제5유형과 제8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영상물 시청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8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2.0배 증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8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48.0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8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3.8배가 증가하였다.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 함께 하는 집단은 제8유형보다 제5유형이 될 가능성이 1.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제5유형과 제8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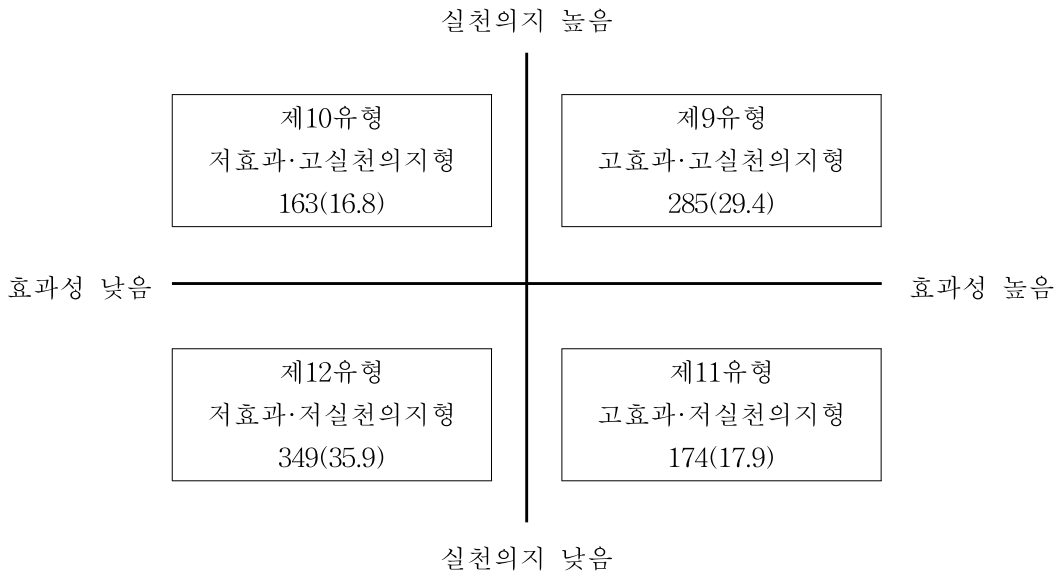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27.493	2.548	116.436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707	.308	5.254	.022*	2.02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872	.406	90.845	.000***	48.019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1.323	.360	13.518	.000***	3.753
	대중매체이용경험요인					
	인터넷 이용	-.116	.160	.520	.471	.891
	인터넷의견교환	.200	.162	4.539	.215	1.222
	영상물 시청기능	.427	.163	6.832	.009**	1.533
	정치효능감요인					
	내재적 효능감	-.059	.124	.223	.637	.943
외재적 효능감	.145	.120	1.459	.227	1.156	
통제변인	성별	-.140	.213	.434	.510	.869
	학교급별	-.182	.133	1.880	.170	.834
	가정소득	.277	.256	1.167	.280	1.319
	학업성적	.144	.203	.502	.479	1.155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598.038 Model Chi-Square=306.316 df=12 p=.000

*p<.05, **p<.01, ***p<.001

(3) 효과성과 실천의지에 대한 분석

복지태도의 하위변인 중 효과성과 실천의지의 평균값 높/낮음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4가지의 복지태도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면 [그림 8]과 같다. 제9유형은 고효과·고실천의지형, 제10유형은 저효과·고실천의지형, 제11유형은 고효과·저실천의지형, 제12유형은 저효과·저실천의지형으로 명명화하였다.



단위: 명(%)

[그림 8] 복지태도 유형 : 효과성과 실천의지를 중심으로

제9유형을 기준으로 제10유형, 제11유형, 제12유형을 조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9유형과 제10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내재적 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영상물 시청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10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3.5배 증가하였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10유형 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3.0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제10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확률이 1.282배가 증가하였고,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함께 하는 집단은 제10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1.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제9유형과 제10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1.198	2.248	24.818	.000	
독립변인	인권의식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253	.341	13.545	.000***	3.50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083	.353	9.388	.002**	2.953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066	.372	.031	.860	.936
	대중매체이용경험요인					
	인터넷 이용	.084	.161	.272	.602	1.088
	인터넷의견교환	.121	.158	.583	.445	1.128
통제변인	정치효능감요인					
	내재적 효능감	-.249	.120	4.265	.039*	.780
	외재적 효능감	.053	.125	.178	.673	1.054
통제변인	성별	.422	.216	3.820	.051	1.525
	학교급별	.017	.132	.017	.897	1.017
	가정소득	.147	.275	.285	.594	1.158
	학업성적	-.112	.197	.322	.570	.894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534.571 Model Chi-Square=65.627 df=12 p=.000

*p<.05, **p<.01, ***p<.001

제9유형과 제11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이 낮은 집단은 제11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1.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11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2.0배 증가하였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

단은 제11유형 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2.4배가 증가하였다.

<표 21> 제9유형과 제11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8.081	2.265	12.734	.000		
독립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668	.338	3.915	.048*	1.95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871	.351	6.140	.013*	2.388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298	.367	.660	.417	1.347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005	.161	.001	.975	.995
		인터넷의견교환	.129	.155	.694	.405	1.138
		영상물 시청기능	.209	.152	1.892	.169	1.232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090	.125	.521	.470	1.094
		외재적 효능감	.029	.125	.055	.814	1.030
	통제변인	성별	.000	.216	.000	.999	1.000
		학교급별	-.375	.130	8.287	.004**	.687
가정소득		.069	.251	.075	.784	1.071	
학업성적		-.003	.202	.000	.986	.997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549.982 Model Chi-Square=37.431 df=12 p=.000

*p<.05, **p<.01, ***p<.001

제9유형과 제12유형을 조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영상물 시청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12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3.7

배 증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12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11.7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제12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2.1배가 증가하였다.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함께 하는 집단은 제12유형보다 제9유형이 될 가능성이 1.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제9유형과 제12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22.351	2.254	98.310	.000	
독립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319	.297	19.745	.000***	3.74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57	.348	49.820	.000***	11.673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717	.339	4.476	.034*	2.048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126	.150	.707	.400	1.134
	인터넷의견교환	.233	.152	2.355	.125	1.262
	영상물 시청기능	.347	.147	5.584	.018*	1.415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147	.117	1.584	.208	.864	
외재적 효능감	.054	.117	.210	.647	1.055	
통제변인	성별	-.053	.198	.072	.789	.948
	학교급별	.136	.127	1.157	.282	1.146
	가정소득	.241	.242	.989	.320	1.273
	학업성적	.196	.180	1.193	.275	1.217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667.364 Model Chi-Square=205.075 df=12 p=.000

*p<.05, **p<.01, ***p<.001

3) 복지태도의 3차원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국가책임, 효과성, 복지실천의지의 세 가지 하위 변인의 높/낮음을 조합하여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각 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낮음을 나누어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복지태도의 유형분포

단위 : 명(%)

구분	복지실천의지				합계
	높음		낮음		
복지책임주체(국가)	높음	낮음	높음	낮음	
효과성(높음)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국가의존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448 (46.14)
	220(22.66)	65(6.69)	85(8.75)	78(8.03)	
효과성(낮음)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	523 (53.86)
	83(8.55)	91(9.37)	75(7.72)	274(28.22)	
합계	303 (31.20)	156 (16.07)	160 (16.48)	352 (36.25)	791 (100.00)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민간의존 배타형으로, 전체 응답자 971명 중 274명에 해당되어 28.2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국가주도 이타형(220명, 22.66%)이 많았으며, 민간주도 배타형(91명, 9.37%), 국가의존 이타형(85명, 8.75%), 국가주도 배타형(83명, 8.55%), 민간의존 이타형(78명, 8.03%)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복지태도 유형 분포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학교급별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태도 유형분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다.

국가주도 이타형의 경우, 중학생이 27.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학생 22.90%, 고등학생 17.97%의 분포를 보였다. 국가주도 이타형과 비교할 때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이 낮은 민간주도 이타형은 대학생 8.39%, 중학생 7.59%, 고등학생 4.35%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책임의 국가주체, 복지기능, 복지실천의지 모두 낮은 민간의존 배타형은 전 학년에서 20% 이상으로, 고르게 높은 모습을 보였다. 복지기능의 효과성은 높고 복지책임의 국가주체는 낮고 복지실천의지가 낮은 민간의존 이타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3.48 → 4.35 → 16.77), 대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 이타형보다 복지효과성이 낮은 국가주도 배타형과 복지의 국가책임이 낮고 복지효과성이 낮은 민간주도 배타형은 전 학년층에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교급별 복지태도 유형 분포

단위 : 명(%)

유형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합계
국가주도 이타형	87(27.53)	62(17.97)	71(22.90)	220(22.66)
민간주도 이타형	24(7.59)	15(4.35)	26(8.39)	65(6.69)
국가의존 이타형	26(8.23)	34(9.86)	25(8.06)	85(8.75)
민간의존 이타형	11(3.48)	15(4.35)	52(16.77)	78(8.03)
국가주도 배타형	29(9.18)	34(9.86)	20(6.45)	83(8.55)
민간주도 배타형	30(9.49)	33(9.57)	28(9.03)	91(9.37)
국가의존 배타형	20(6.33)	39(11.30)	16(5.16)	75(7.72)
민간의존 배타형	89(28.16)	113(32.75)	72(23.23)	274(28.22)
합계	316(100.00)	345(100.00)	310(100.00)	971(100.0)

조사 대상자 중 가장 학년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비교해 보면, 국가주도 이타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고 있어 청소년의 복지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인에 가까운 나이의 청소년에게서 국가주도 이타형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후 성인기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학교급별 복지태도 유형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인 경우는 민간의존 배타형 28.16%, 국가주도 이타형 27.53%, 민간주도 배타형 9.49%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민간의존 배타형 32.75%, 국가주도 이타형 17.97%, 국가의존 배타형 11.30%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경우는 민간의존 배타형 23.23%, 국가주도 이타형 22.90%, 민간의존 이타형 16.77%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급별에 따른 복지태도 유형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복지태도 유형에 따라 어떤 독립변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태도의 유형 중 국가주도 이타형을 기준 유형으로 상정하여 7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들 각각의 회귀계수가 회귀 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각 독립변인들이 특정 유형의 복지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민간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국가의 복지책임의식이 낮다. 민간주도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25>와 같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인권의식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주도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11.9배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주도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4.1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민간주도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1.6배가 증가하였다.

<표 25> 민간주도 이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3.931	3.756	13.754	.000		
독립 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066	.554	.014	.904	1.06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75	.581	18.126	.000***	11.876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418	.583	5.917	.015*	4.129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201	.243	.686	.407	.818
		인터넷의견교환	-.218	.257	.717	.397	.804
		영상물 시청기능	.393	.246	2.548	.110	1.482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477	.189	6.358	.012*	.620
		외재적 효능감	-.047	.211	.049	.825	.954
	통제변인	성별	.171	.337	.256	.613	1.186
학교급별		.022	.205	.012	.913	1.023	
가정소득		-.058	.395	.022	.883	.944	
학업성적		-.368	.302	1.487	.223	.692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239.038 Model Chi-Square=67.015 df=10 p=.000

*p<.05, **p<.01, ***p<.001

(2) 국가의존 이타형

국가의존 이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복지실천의지가 낮은 유형이다. 국가의존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국가의존 이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8.228	3.081	7.130	.008		
독립 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749	.433	2.997	.083	2.11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753	.482	2.445	.118	2.123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524	.499	1.102	.294	1.688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043	.201	.045	.831	1.044
		인터넷의견교환	.000	.203	.000	.999	1.000
		영상물 시청기능	.177	.194	.831	.362	1.193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013	.162	.007	.936	1.013
		외재적 효능감	-.047	.157	.088	.767	.954
	통제변인	성별	-.004	.275	.000	.989	.996
학교급별		-.065	.169	.146	.702	.938	
가정소득		.090	.331	.073	.787	1.094	
학업성적		-.114	.259	.194	.659	.892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348.014 Model Chi-Square=12.930 df=10 p=.374

*p<.05, **p<.01, ***p<.001

(3) 민간의존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국가책임과 복지실천의지가 낮은 유형이다. 민간의존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급별,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이 낮은 집단은 민간의존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2.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의존 이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27.5배가 증가하였다.

<표 27> 민간의존 이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8.727	3.820	24.028	.000		
독립 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447	.521	.735	.391	1.56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314	.622	28.361	.000***	27.492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904	.566	2.548	.110	2.470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194	.253	.592	.442	.823
		인터넷의견교환	.085	.263	.106	.745	1.089
		영상물 시청기능	.425	.247	2.967	.085	1.530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133	.192	.479	.489	.876
		외재적 효능감	.153	.200	.584	.445	1.165
	통제변인	성별	.266	.348	.585	.444	1.305
학교급별		-.864	.217	15.876	.000***	.421	
가정소득		.069	.388	.032	.858	1.072	
학업성적		-.081	.348	.054	.816	.922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238.903 Model Chi-Square=103.722 df=10 p=.000

*p<.05, **p<.01, ***p<.001

(4) 국가주도 배타형

국가주도 배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복지효과성을 낮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국가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28>과 같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제변인 중 성별, 인권의식의 하위변 중 시민·정치적 권리,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 이용,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 성별에서 남자는 국가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2.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의 하위 변인 중 시민·정치적 인식이 높은 집단은 국가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5.8배

가 증가하였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는 집단은 국가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1.6배가 증가하였다.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은 국가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1.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국가주도 배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9.750	3.285	8.807	.003		
독립 변인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761	.462	14.552	.000***	5.82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2	.557	.632	.427	1.557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299	.521	.331	.565	.741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453	.216	4.382	.036*	1.572
		인터넷의견교환	.015	.221	.004	.947	1.015
		영상물 시청기능	.231	.210	1.201	.273	1.259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460	.157	8.561	.003**	.631
		외재적 효능감	-.079	.171	.212	.645	.924
	통제변인	성별	.792	.291	7.421	.006**	2.208
학교급별		.175	.183	.918	.338	1.192	
가정소득		.284	.360	.623	.430	1.329	
학업성적		-.162	.272	.354	.552	.850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310.679 Model Chi-Square=45.120 df=12 p=.000

*p<.05, **p<.01, ***p<.001

(5) 민간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국가의 복지책임 의식과 복지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유형이다. 민간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약자·소수자의 권리, 대중매체 이용경험의 하위변인 중 영상물 상영기능,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내재적 효능감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39.1배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3.8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함께 하는 집단은 민간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2.0배가 증가하였다.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민간주도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1.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민간주도 배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24.552	4.019	37.316		
인권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837	.530	2.498	.114	2.3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668	.608	36.385	.000***	39.180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337	.589	5.146	.023*	3.806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450	.253	3.166	.075	.638
독립 변인	인터넷의견교환	.031	.254	.015	.903	1.032
	영상물 시청기능	.686	.241	8.085	.004**	1.986
	정치 효능감 요인	-.436	.195	4.984	.026*	.647
통제변인	외재적 효능감	.213	.190	1.253	.263	1.238
	성별	.333	.341	.951	.329	1.395
	학교급별	-.197	.210	.881	.348	.821
	가정소득	.174	.455	.147	.702	1.191
	학업성적	-.342	.334	1.052	.305	.710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242.885 Model Chi-Square=133.093 df=12 p=.000

*p<.05, **p<.01, ***p<.001

(6) 국가의존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복지실천의지와 복지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유형이다. 국가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30>과 같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민·정치적 권리인식이 높은 집단은 국가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5.4배가 증가하였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식이 높은 집단은 국가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7.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국가의존 배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16.879	3.663	21.234	.000			
독립 변인	인권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692	.492	11.813	.001**	5.42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95	.622	10.296	.001**	7.354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840	.582	2.084	.149	2.316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114	.232	.242	.623	1.121	
		인터넷의견교환	-.383	.264	2.108	.147	.682	
		영상물 시청기능	.426	.224	3.601	.058	1.530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331	.176	3.530	.060	.719	
		외재적 효능감	-.006	.192	.001	.975	.994	
	통제변인		성별	-.386	.325	1.412	.235	.679
			학교급별	.186	.201	.857	.355	1.205
		가정소득	.007	.396	.000	.987	1.007	
		학업성적	-.366	.290	1.595	.207	.693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275.284 Model Chi-Square=59.212 df=12 p=.000

*p<.05, **p<.01, ***p<.001

(7) 민간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은 국가주도 이타형에 비해 국가책임, 복지실천의지와 복지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은 유형이다. 민간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약자·소수자의 권리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매체 이용경험의 하위변인 중 영상물 시청기능, 정치효능감의 하위변 중 내재적 효능감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민간의존 배타형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절편		-33.185	3.327	99.465	.000	
독립 변인	인권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280	.386	10.977	.001**	3.59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135	.505	67.051	.000***	62.499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279	.444	8.308	.004**	3.594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082	.194	.180	.671	1.086
	인터넷의견교환	.361	.198	3.333	.068	1.435
정치 효능감 요인	영상물 시청기능	.428	.201	4.553	.033*	1.534
	내재적 효능감	-.335	.156	4.624	.032*	.715
	외재적 효능감	.103	.150	.470	.493	1.109
통제변인	성별	.219	.263	.693	.405	1.245
	학교급별	.114	.169	.457	.499	1.121
	가정소득	.481	.324	2.209	.137	1.617
	학업성적	.306	.246	1.548	.213	1.358

기준집단 : 국가주도 이타형

성별 : 남성=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Log Likelihood=392.199 Model Chi-Square=286.715 df=12 p=.000

*p<.05, **p<.01, ***p<.001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의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3.6배가 증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62.5배 증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의식이 높은 집단은 민간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3.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함께 하는 집단은 민간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될 가능성이 1.5배가 증가하였다.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민간의존 배타형보다 국가주도 이타형이 1.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태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를 조합한 유형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복지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들은 어떠한 요인과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우선, 인권의식은 1차원, 2차원, 3차원 유형에서 국가주도 이타형의 복지태도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국가주도 이타형의 복지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중매체 이용경험에서는 부모와 함께 영상물 시청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국가주도 이타형의 복지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효능감에서는 내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국가주도 이타형의 복지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통제변인 중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국가주도 이타형의 복지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및 유형별 영향요인

구분	1차원			2차원									3차원							
	국가 책임	효과성	실천 의지	국가책임·효과성			국가책임·실천의지			효과성·실천의지			국가책임·효과성·실천의지							
				민간 의존 고효과	국가 책임 저효과	민간 의존 저효과	민간 의존 고실천	국가 책임 저실천	민간 의존 저실천	저효과 고실천	고효과 저실천	저효과 저실천	민간 주도 이타	국가 의존 이타	민간 의존 이타	국가 주도 배타	민간 주도 배타	국가 의존 배타	민간 의존 배타	
인권 의식	시민	○	○		○	○		○	○	○	○	○				○	○	○		
	경제	○	○	○	○	○	○	○	○	○	○	○	○		○		○	○		
	약자	○		○	○	○	○	○	○	○		○	○				○	○		
대중 매체	이용															○				
	교환	○				○														
정치 효능 감	시청	○				○					○						○	○		
	내재		○		○	○								○			○	○		
통제 변수	성별								○(-)								○			
	학교 소득 성적	○		○(-)								○(-)				○(-)				

* 시민 : 시민·정치적 권리 / 경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약자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 이용 : 인터넷 이용 /
 교환 : 인터넷의견교환 / 시청 : 영상물시청기능
 * (-) : 부적효과
 * ■ :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유형

4.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의 통제 변인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적 효능감 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복지태도와 복지태도의 하위요소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인자(VIF)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8에서 제시한 것처럼 피어슨 상관계수가 모두 0.7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권 의식	1. 시민·정치적 권리	1											
	2.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227**	1										
	3.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70**	.442**	1									
대중 매체 이용 경험	4. 인터넷 이용	.071*	.140**	.092**	1								
	5. 인터넷 의견교환	.087**	.240**	.250**	.323**	1							
	6. 영상물 시청기능	.136**	.168**	.111**	.214**	.244**	1						
정치 효능감	7. 내재적	-.109**	-.229**	-.199**	-.158**	-.214**	-.115**	1					
	8. 외재적	.051	.173**	.177**	.070*	.079*	-.022	.081*	1				
	9. 성별	.006	.041	.211**	.034	.071*	.172**	-.011	.082*	1			
	10. 학교급별	-.005	-.024	-.048	.049	.122**	-.052	-.001	.076*	.018	1		
	11. 가정소득	.022	-.037	.009	.105**	.029	.070*	-.035	-.071*	-.045	-.251**	1	
	12. 학업성적	.083**	.077*	.003	.147**	.136**	.077*	-.149**	-.010	-.108**	.026	.277**	1

*p<.05, **p<.01

성별 : 남=1, 학교급별: 대학생=1, 가정소득: 상=1, 학업성적: 상=1

2) 복지태도 구성요소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의 국가책임정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모델 1을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은 국가책임의 변량을 3.2% 설명하고 있으며, 남자일수록 (t=3.408, p=.05), 가정소득이 높을수록(t=4.198, p=.000),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t=-2.838, p=.00) 국가책임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국가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3.982	.113		35.371***	.058	.276		.210
성별	.114	.033	.108	3.408*	.023	.029	.022	.797
학교급별	-.027	.021	-.042	-1.295	-.002	.018	-.003	-.095
가정소득	.181	.043	.139	4.198***	.092	.037	.071	2.514*
학업성적	-.089	.031	-.092	-2.838**	-.015	.027	-.016	-.558
시민·정치적 권리					.056	.043	.036	1.307
인권 의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21	.045	.358	11.470***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280	.049	.178	5.715***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인터넷 이용				-.040	.022	-.051	-1.770
	인터넷의견교환				.058	.022	.080	2.676**
	영상물 시청기능				.071	.021	.096	3.367**
정치 효능감	내재적 효능감				-.029	.017	-.048	-1.708
효능감	외재적 효능감				.045	.017	.074	-1.668
					R ² =.326 수정된 R ² =.318			
					F=38.681***			
					Durbin-Watson=1.894			
					△R ² =.302***			

*p<.05, **p<.01, ***p<.001

모델 2는 모델 1에서 독립변인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모델 1에 비해 29.0% 더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t=2.514$, $p=.05$)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11.470$, $p=.000$),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5.715$, $p=.000$)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 의견교환을 많이 할수록($t=2.676$, $p=.00$),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많이 할수록($t=3.367$, $p=.00$)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2)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모델 1을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성적은 효과성의 변량을 1.6% 설명하고 있으며, 남자일수록($t=2.378$, $p=.05$), 가정소득이 높을수록($t=2.162$, $p=.05$), 학업성적이 낮을수록($t=-2.270$, $p=.05$)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독립변인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모델 1에 비해 23.9% 더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학교급별이 높을수록($t=2.232$, $p=.05$)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4.312$, $p=.00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8.501$, $p=.000$),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3.914$, $p=.000$)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 의견교환을 많이 할수록($t=2.775$, $p=.00$),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많이 할수록($t=3.317$, $p=.00$)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t=-2.225$, $p=.05$)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35>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3.702	.090		41.111***	.695	.231		3.015**
성별	.064	.027	.076	2.378*	.003	.024	.004	.134
학교급별	.018	.017	.034	1.050	.034	.015	.065	2.232*
가정소득	.075	.034	.072	2.162*	.022	.030	.022	.731
학업성적	-.057	.025	-.075	-2.270*	.011	.022	.014	.468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55	.036	.125	4.3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22	.038	.279	8.50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60	.041	.128	3.914***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025	.019	.040	1.328
	인터넷의견교환 영상물 시청기능				.050	.018	.088	2.775**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032	.014	-.066	-2.225*
	외재적 효능감				-.003	.014	-.007	-.226
					R ² =.255 수정된 R ² =.246			
					F=27.361***			
					Durbin-Watson=1.779			
					△R ² =.238***			

*p<.05, **p<.01, ***p<.001

(3)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천의지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모델 1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독립변인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복지실천의지의 변량을 16.2%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

수록(t=2.218, p=.0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7.372, p=.000),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3.110, p=.00)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 의견교환을 많이 할수록(t=2.692, p=.00) 실천의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6> 실천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3.669	.114		32.222***	.576	.308		1.867
성별	.030	.034	.028	.882	-.033	.033	-.031	-1.007
학교급별	-.034	.021	-.052	-1.569	-.013	.020	-.021	-.662
가정소득	.120	.044	.093	2.753**	.063	.041	.049	1.553
학업성적	-.016	.032	-.016	-.498	.046	.030	.048	1.532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06	.048	.068	2.2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73	.051	.257	7.372***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170	.055	.108	3.110**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인터넷 이용				.043	.025	.056	1.735
	인터넷의견교환				.015	.024	.021	.636
	영상물 시청기능				.063	.024	.085	2.692**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013	.019	-.021	-.665
	외재적 효능감				.012	.019	.019	.620
					R ² =.162 수정된 R ² =.152			
					F=15.461***			
					Durbin-Watson=1.976			
					△R ² =.159***			

*p<.05, **p<.01, ***p<.001

3)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해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을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은 복지태도의 변량을 2.5% 설명하고 있으며, 남자일수록($t=2.772$, $p=.05$), 가정소득이 높을수록($t=3.894$, $p=.000$), 학업성적이 낮을수록($t=-2.305$, $p=.05$) 복지태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복지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3.784	.084		45.075***	.443	.199		2.226*
성별	.069	.025	.089	2.772**	-.002	.021	-.003	-.099
학교급별	-.014	.016	-.030	-.913	.006	.013	.013	.476
가정소득	.125	.032	.130	3.894***	.059	.026	.061	2.249*
학업성적	-.054	.023	-.075	-2.305*	.014	.019	.019	.714
인권 의식 요인	시민·정치적 권리				.106	.031	.091	3.41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05	.033	.376	12.401***
대중 매체 이용 경험 요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203	.035	.174	5.764***
	인터넷 이용				.009	.016	.016	.589
정치 효능감 요인	인터넷의견교환				.041	.016	.077	2.639**
	영상물 시청기능				.064	.015	.117	4.230***
정치 효능감 요인	내재적 효능감				-.024	.012	-.055	-1.994*
	외재적 효능감				.018	.012	.039	1.468
					R ² =.368 수정된 R ² =.360			
					F=46.386***			
					Durbin-Watson=1.909			
					△R ² =.351***			

* $p<.05$, ** $p<.01$, *** $p<.001$

모델 2는 모델 1에서 독립변인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의 하위변인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모델 1에 비해 34.3% 더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t=2.249$, $p=.05$) 복지태도를 높게 인식하였고,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시민·정치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43.146$, $p=.0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12.401$, $p=.000$),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를 높게 인식할수록($t=5.764$, $p=.000$)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경험 중 인터넷 의견교환을 많이 할수록($t=2.639$, $p=.00$),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을 많이 할수록($t=4.230$, $p=.00$) 복지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t=-1.994$, $p=.05$)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오늘날 청소년의 복지태도 함양은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교육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과제가 순조롭게 달성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한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복지와 이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자신의 복지욕구에는 적극적이면서도 타인의 복지욕구에는 냉소적인 모습이 만연해 있다(김자영, 2012). 이렇듯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복지태도를 함양해가기 어렵다. 청소년의 복지태도는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식구들, 학교에서의 교사 및 친구들,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통하여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종합적으로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복지태도가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적 조치 모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하기 전에 복지교육의 목표인 복지태도는 무엇이고, 어떤 변인의 영향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 후에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해 개념화하고, 복지태도의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의 복지태도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복지태도는 복지국가와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습득된 선 경험이 개인의 사상과 관점,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특정한 경향을 가지게 하는

정신적 조정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복지태도는 국가의 책임정도, 복지기능의 효과성, 실천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개념화하였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두 가지, 세 가지 조합 즉, 1차원, 2차원, 3차원 분석을 통해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여 각 명명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중 3차원 분석 결과,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국가의존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의 여덟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또한 복지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의 다섯 가지 변인이 선정되었다.

복지태도에 대한 정의 및 복지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증적 확인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4학년까지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총 971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의 복지태도 수준은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별로 차이가 있었다.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별로 비교하면, 5점 만점에 국가책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4.30점), 효과성(3.88점), 실천의지(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태도의 수준은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복지의 국가책임과 복지기능의 효과성이 높았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국가책임을 높게 인식하며 복지인식수준이 높다는 백정미외, 2008)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청소년과 성인의 남녀 간에는 복지태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학교급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주현(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2차원, 3차원 분석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복지태도 형성에 있어서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1차원 분석으로 복지태도 구성요소의 평균값(높/낮음)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52.3%),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며(53.6%), 실천의지에서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7%). 다음

으로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두 가지씩 조합한 2차원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국가책임과 효과성 조합에서는 제4유형(민간의존·저효과성)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제1유형(국가책임·고효과성)이 31.4%로 나타났다. 국가책임과 실천의지의 조합에서는 제8유형(민간의존·저실천의지형)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제5유형(국가책임·고실천형)이 3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천의지와 효과성의 조합에서는 제12유형(저효과·저실천의지형)이 35.9%, 제9유형(고효과·고실천의지형)이 29.4% 분포하고 있었다.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조합한 3차원 분석을 통해 복지태도의 영역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 등의 여덟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의존 배타형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주도 이타형이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복지태도 구성요소의 1차원분석에서는 세 가지 하위변인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2차원, 3차원 분석에서는 양극단의 복지태도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복지태도 유형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인 경우는 민간의존 배타형 28.16%, 국가주도 이타형 27.53%, 민간주도 배타형 9.49%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민간의존 배타형 32.75%, 국가주도 이타형 17.97%, 국가의존 배타형 11.30%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경우는 민간의존 배타형 23.23%, 국가주도 이타형 22.90%, 민간의존 이타형 16.77%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별에 따른 복지태도 유형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태도 유형분포의 결과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주도 이타형과 정반대 입장인 민간의존 배타형의 분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태도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태도의 이중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독립변수의 어떠한 영향요인에 의해 바람직한 복지태도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별 영향요인으로는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태도의 세 가

지 구성요소 중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한 2차원 분석에서도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연구한 3차원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의식의 하위변인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국가주도 이타형의 복지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인권의식은 바람직한 복지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 이용경험에서는 부모와 함께 영상물 시청을 하는 집단일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박영숙(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가치관은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복지의식을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복지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효능감에서는 내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복지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주현(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였을 경우, 긍정적으로 반영된다고 인식할 때 바람직한 복지태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분야에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의 국가책임에는 가정소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인터넷 의견교환,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기능의 효과성에서는 학교급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인터넷 의견 교환,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 내재적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복지실천의지는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 전체에 대해서는 가정소득,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인터넷 의견교환, 부모와의 영상물 시청, 내재적 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을 개념으로 한 인권의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준용(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세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를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복지태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그 개념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가 복지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태도의 3구성요소 모형을 기본으로 복지태도를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지태도의 개념은 복지태도 및 복지교육과 관련한 연구에 새로운 하나의 방향과 표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복지태도를 세 가지 구성요소의 높고 낮음을 조합한 1차원 분석, 세 가지 구성요소 중 두 가지 구성요소를 조합한 2차원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복지태도의 구성요소의 세 가지를 조합한 3차원 분석을 통해서 여덟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국가주도 이타형, 민간주도 이타형, 국가의존 이타형, 민간의존 이타형, 국가주도 배타형, 민간주도 배타형, 국가의존 배타형, 민간의존 배타형으로 명명된 여덟 가지 유형은 청소년의 복지태도 실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가주도 이타형인 복지국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이 표집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력의 방향이 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검증 결과는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 또한 각 요인의 영향력이 활성화되는데 배경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바람직한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복지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다. 본 연구는 복지교육의 목표인 복지태도를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복지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의 재개념화는 복지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통합사회 과목을 신설하여 인권, 시장, 정의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으로 학습된 선경험이 개인의 사상과 경향, 사물을 인식하고 재현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특정한 경향을 가지게 된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과 가정에서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복지태도가 주관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보장 등의 복지인식에 대한 내용이 통합사회 과목의 교육 내용에 담겨져 있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하위영역으로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복지교육이 지향하는 세부 목표를 서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각 세부목표별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복지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복지태도 실태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복지태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중학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청소년 집단의 복지태도 현황을 연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이 복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복지태도의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주도 이타형을 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 유형들은 각 유형별로 각각 미진한 복지태도의 영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청소년이 복지의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 불완전한 복지태도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지태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복지태도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복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녀에 따른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복지교육정책을 달리 시행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의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에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지태도 중 특히 취약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태도의 영향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복지의 국가책임, 효과성,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의존 배타형이나 민간의존 이타형의 청소년에게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복지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앞서 제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교과서가 복지태도 함양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통합사회과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복지태도를 고르게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의 복지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지 양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더라도 청소년들의 이해수준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청소년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이라든가 실생활에서 참여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복지와 관련된 목록에 대해 나열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이를 가정, 학교 등의 실생활에서 적용시켜보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지교육은 의미 있는 교육경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유형화 하였고,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어 복지태도 연구 활성화에 밑거름이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 결과 한계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복지태도 조사 설문지에 활용된 복지태도 설문문항은 복지태도의 여러 구성요소 중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된 것으로, 복지의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복지태도 요소들의 배합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거론하지 않은, 또 다른 유의미한 복지태도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지태도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이용경험으로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복지태도 형성 및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은 복지태도의 대부분 유형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복지태도의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인 복지교육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복지태도 형성과정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태도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성별, 학교급별, 가정소득, 학업성적, 인권의식, 대중매체 이용경험, 정치효능감 등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복지태

도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침이 더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청소년의 복지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향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찾고,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뿐 아니라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복지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성인의 복지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성인의 복지태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생활영역과 경험의 폭이 넓혀지면서 복지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인의 복지태도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다양한 연령층별 연구들을 통해 복지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친복지적 회사 문화, 대학에서의 복지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복지교육 등 복지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복지태도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대학생 집단의 특정한 시기에 대한 복지태도를 조사하였다.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복지태도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는 지적인 성장, 다양한 경험,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지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국민의 일부 집단인 청소년의 복지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양적연구이면서 질적연구인 Q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복지태도에 대한 진단이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차원에서는 복지정책, 복지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태도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 요소이자, 주요 가치이며 생활속에서 실천해야하는 실천의지이다. 복지국가 형성에 밑거름이 되는 복지태도를 현실적으로 구현해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실현되는 공동의

의식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복지태도를 키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복지태도가 무엇인지, 이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였다. 청소년들의 복지태도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축적되어, 건강한 복지태도를 갖는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 가는 길이 더욱 더 탄탄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가상준. 2007. 정치효능감 및 신뢰감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제12권 제1호, pp. 109-127.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세대 집단 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3호, pp. 116-144.
- 강정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순원. 2000.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정책방안」.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 연구과제.
- 고명석. 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 구정화·송현정·설규주.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조난심·강명숙·설규주. 2007. 「인권교육 내용체계화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아침이슬.
- _____. 2011.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원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 김경동.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 김경옥. 2002. 중·고등학생의 사회복지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우. 2011.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창지사
- 김광웅·방은령. 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84집.
- 김규. 1989. 텔레비전 환경론. 나남출판사.
- 김기수·조무남. 1999. 「교육철학탐구」. 교육과학사.
- 김묘성·김의철·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투표행동을 통해 본 정치의식

- 차이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제1호, pp. 167-168.
- 김병년. 2008. 한국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옹호활동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와 정치효능감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비환·유홍립외. 2011.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이학사.
- 김상균. 1985.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제4호, pp. 87-113.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5권, pp. 1-33.
- 김상미·남진열. 2014. 후기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체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4호, pp. 173-193.
- 김선남. 1997. 매스미디어와 여성. 서울: 범우사.
- 김성수·이종춘. 2014.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에 따른 인권의식의 문제. 한국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21호, pp127-149.
- 김수지. 2015. SNS이용이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 사회적 신뢰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2009 제1호, pp. 561-572.
- _____.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pp. 87-106.
- 김영란. 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논집. 제9권, pp. 229-249.
- 김영모. 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서울: 일조각
- _____. 1985. 한국청소년의 사회관. 사회정책연구, 제6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 211-240.
- _____. 2015.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재정분담의 정치: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권 제2호, pp. 85-115,
- 김옥기. 2015. 학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서남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김요셉·김성천·유서구. 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3호. pp. 103-126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호, pp. 183-212.
- 김은지·안상훈. 2010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사회복지연구, 제4권 제2호, pp. 309-334.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일. 2009.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김홍규. 2009. 「Q방법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자. 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 분화. 사회복지정책. 제8권, pp. 106-124.
- _____.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인의 조절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제20권 제2호, pp. 35-68.
- 남인용·허일수. 2012.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치 효능감과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참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24호, pp. 5-35.
- 노대명·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제13권, 제1호, pp. 191-210.
- 류지현·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pp. 175-210.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pp. 79-101.
- 문미희. 2005.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학술정보.
- _____. 2007. 중고등학생의 도덕판단력과 인권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고화 발달국면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 437-457.
- 문진영. 2013. 인권과 사회복지 : 쟁점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39호, pp. 83-116.
- 박가나. 2014.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 과교육연구. 제21호, pp. 85-100 .
- 박병현·홍보선. 1995.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제14권 제1호, pp. 85-110.
- 박상준·임태송. 2010.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3권 제2호, pp. 39-58.
- 박상호. 2005. 미디어 신뢰도와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참여행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준·김주일. 2015.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2호, pp. 185-213.
- 박승곤·김수정·문성호. 2013.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별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4호, pp. 199-224.
- 박영숙. 2004. 청소년의 정치, 사회의식 실태와 영향 매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 63-92.
- 박정서. 201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환. 2003. 고등학생의 대중매체경험 실태분석과 대중매체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민·배병룡·유재원·최승범·최홍석. 2001.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 제35권 제1호, pp. 191-209.
- 박창남·문성호·이혜정. 2003. 청소년 인권과 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3권, pp. 99-140
- 배병룡. 201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차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pp. 39-63.
-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제37권, pp. 319-344.
- 배지연·김은이. 2003. 사회적 지지에 관한 사회복지 논문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2003, pp. 246-265.

- 변미희. 2002.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2호, pp. 75-89.
- 서선진. 2006.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여자중학생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길·박상호·한동준. 2010.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 TV토론이 유권자의 정치인 이미지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19호, pp. 73-103.
- 송효진. 2010. 2030세대의 인터넷 참여와 전자정부.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97-120.
-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 경제위기시대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관점에 대한 소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3-11.
- 신재선. 2012.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이 정치효능감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1호, pp. 163-192.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제9권, pp. 211-228.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pp. 229-259.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1호, pp. 229-256.
- 양인숙. 2006. 인권 개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권의식. 경북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양희규. 2001.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녹색평론, 제58호.
- 우아영. 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급간 비교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미. 2009.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 유문무. 2015.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윤동섭·문성호. 2010. 청소년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 학회지. 제7권 제1호, pp. 101-123.
- 윤수찬. 2013. 지방의회 기능이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영진·김의철·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정치효능감, 신뢰의식과 정치 참여행동 차이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제1호, pp. 169-170.
- 윤탈영. 1983. 방송광고가 어린이·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방송연구.
- 이성균 .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 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pp. 205-228.
- 이소희·이재연. 1987. 한국도시부모의 아동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8권, 제2호.
- 이순영. 2002.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권, pp. 85-110.
- 이준기.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용. 2015.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 77-99.
- 이진희. 2015. 적극적 스마트폰 이용과 중독의 경계를 설명하는 요인 탐색.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 연구, 제30권, 제2호, pp. 254-286.

- 이혜원. 2008.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한울아카데미.
- 이훈희·김윤태. 2012. 한국 대학생의 복지태도: Q방법론을 통해 본 세 가지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2호, pp. 23-49.
- 이훈희·김윤태·이원지. 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한국 사회보장학회. 제27권 제2호, pp. 1-25.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7. 「인권법」. 아카넷.
- 인권운동사랑방인권교육실. 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 임준형. 2013. 한국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현. 2013.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계급, 자기이해, 이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환. 2005. 인터넷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환수. 2015.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남경. 2013. 사회복지의 문화적 토대, 복지태도, 그리고 문화적 문맥: 사회복지 정책 연구에 있어 세 가지 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제39호, pp. 235-273.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1호, pp. 157-191.
- 조중빈. 1988. 사회계층과 정치의식. 한국정치학. 제22권, 제3호, pp. 131-146.
-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인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 203-225.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호, pp.223-254.
- 최정화. 2012. SNS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27호, pp. 369-408.
- 최현. 2009. 「인권」. 책세상.
- 추병완. 1999. 「도덕 교육의 이해」. 백의.

- 하중원·이종혁. 2008. 실제적 효능감과 설득적 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2008.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6권 제4호, pp. 29-51.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 함철호·이중섭. 2010. 지역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pp. 299-325.
- 허만형. 2009. 사회복지. 2009. 이데올로기 정향분석 : 서울시민의 복지의식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pp. 99-118.
- 현영렬. 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헤럴드경제, 2015. 5. 14., <대법, 학생甲 논란‘ 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판단>.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Anderß, H. and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lekesaune. M, &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s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lekesaune. M. (2006).**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wards welfare state policies.* ISER Working, 6-45.
- Briggs, Asa. (1961).**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
- Christine Lipsmeyer & Timothy Nordstrom (2003).** *East versus West: comparing political attitudes and welfare preference across European societ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 339-364.
- Cook, B. (2006)**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s of welfare state

- developments', *Working Paper No. 06-06*, Centre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 University of Newcastle.
- Cybelle, F. (2004).** Changing color of welfare?: Whites' attitudes toward latinos influence support for welf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3), 580-625.
- Donnelly, J. (200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 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bert, Neil & Paul & Terrell.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남찬섭·윤태균 역. 2006.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Goerres, A. (2007).** *Demands for welfare state provisions by a powerful generation: Comparing British and German baby-boomer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7 Bi-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nsortium of Political Research. 6-8 September 2007.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N.Y. Harper Books.
- Hansenfeld, Y. & J. A. Rafferty.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Jennrich, R. I. & Sampson, P. F. (1966).** Rotation for simple loadings. *Psychometrika*, 31(3), 313-323.
- Kluegel, J. R. & M. Miyano. (1995).** *Justice Belief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In J.R. Kluegel et al..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Kosster, F. (2008).** *The European union's impact on welfare state attitudes: a longitudinal and multilevel investigation*. Paper prepared for the 38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budapest, June 26-30.
- Lewin-Epstein, N. et al. (2003).**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s

- the Welfare State. *Social Justice Research*, 16(1), 1-27.
- Mau, S. (2001).** *Pattern of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of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 Mcperson, J., Miller, J., Welch, S., & Clark, C. (1997).**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PE: Using path analysis to test alternative mode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509-521.
- Michael J. Sandel. (2010).**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Penguin Book;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 Morrell, M. E. (2003).**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for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Public Opinion Quarterly*, 67(4), 589-602.
- Muuri, A. (2009).** The Impact of the us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r social security benefits on attitudes to social welfare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2), 182-193.
- Ross, Fiona. (2000).** *From Welfare Reform in Affluent Societies: Rendering Retrenchment more Palatabl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UI Working, 15.
- Stephen C. Craig & Michael A. Maggiotto. (1982).** Measuring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8(3), 85-109.
- Stephen C. Craig, Richard G. Niemi & Glenn E. Silver.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53-74.
- _____. (2003).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 Taylor-Gooby. (2001).** Sustaining state welfare in hard times: Who will foot the bill.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2), 133-147.
- T. H. Marshall. (1963).**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s*, Heineman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 126-128.
- Van Oorschot, W. (1999).** *The Legitimacy of Welfare*. A Sociological Analysis of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Schemes.
- Vasak, K. (1982).**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ed., Philip Alston, Westport, Conn.: Creewood Press; 박홍규 역. 1986. 「인권론」. 실천문학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정치효능감, 대중매체이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문항은 옳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최대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 남진열

연구자 : 김상미

(ksm0727@jejunu.ac.kr)

I. 인권의식

1. 다음은 여러분의 **인권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형제도는 없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의 체벌은 허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이름을 밝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악성댓글 같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HIV/AIDS(에이즈)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찬성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인과 미성년자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실업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⑤
9	국민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항이므로 보건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위한 (증세)정책은 강력히 실시되어야 한다 (증세란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함)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는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국적이 다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자를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성적 소수자(동성애자)는 성적 성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 교장이 10대 미혼모 여학생에게 학교를 자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그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반말, 욕설 등 언어 폭력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복지태도

2. 다음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임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하께서 생각하는 곳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개인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 사회	정부
19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20	실업자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21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22	노인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항목	개인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 사회	정부
23	장애인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24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25	주거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26	교육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⑤

3.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는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 다
27	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9	복지가 확대될수록 돕지 않아도 될 사 람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복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주어져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복지가 확대될수록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는 곳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훨씬 더 줄여야 한다	좀 더 줄여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좀 더 늘려야 한다	훨씬 늘려야 한다
33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34	실업자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35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36	노인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37	장애인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38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39	주거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40	교육에 대한 재정	①	②	③	④	⑤

Ⅲ. 매체 이용경험

5. 다음은 신문, 인터넷 전자 신문, TV의 뉴스나 시사관련 교양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용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편이다	가끔 보는 편이다	자주 보는 편이다	관심을 갖고 매우 자주 본다
41	신문의 뉴스와 사회면	①	②	③	④	⑤
42	인터넷 전자 신문의 뉴스와 사회면	①	②	③	④	⑤
43	야후나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	①	②	③	④	⑤
44	공중파 TV뉴스와 시사관련 교양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45	뉴스전문 방송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인터넷이용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용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정부기구나 사회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된 글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47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문제관련 소식을 알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9	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에서 복지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나의 의견을 올린다	①	②	③	④	⑤
50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문제 사안에 투표를 한다면 동참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1	인터넷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인터넷에서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영상물 시청(TV)에 관한 질문입니다.

53) 부모님과 어느 정도 함께 시청하시나요?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함께 시청하지 않는다	거의 함께 시청하지 않는다	가끔 함께 시청한다	대개 함께 시청한다	항상 함께 시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55)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난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와 함께 하는 시청하는 영상물(TV)이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	프로그램 내용이나 등장인물은 가족간에 대화 소재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7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끼는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58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59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①	②	③	④	⑤
60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함께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상호 질문과 응답의 기회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62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기능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중요한 사회 변화에 대한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정치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는 곳에 ○ 또는 √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64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5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6	내가 투표를 하건 안하건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7	나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8	정치는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9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0	정치인들은 당선된 후에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1	정치인들은 당선된 후 시민들과의 약속을 빨리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72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3	정치인들은 단지 표를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74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든지 정치 활동은 모두 마찬가지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요인분석 후 설문문항 구성

구성 요소	하위 변인	측정문항	공통성	요인 적재량	최종 문항	신뢰도
국가 책임		①국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662	.501	○	.841
		②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684	.609	○	
		③국가는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776	.719	○	
		④국가는 노인에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66	.740	○	
		⑤국가는 장애인에게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93	.788	○	
		⑥국가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47	.541	○	
		⑦국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86	.387	×	
		⑧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77	.501	○	
복지 태도		①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	.553	.396	×	.683
		②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673	.595	○	
		③복지는 확대될수록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다*	.612	.447	○	
		④복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	.692	.675	○	
		⑤복지가 확대될수록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621	.478	○	
		⑥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든다	.644	.513	○	
실천 의지		①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예산	.700	.676	○	.801
		②실업자에 대한 복지예산	.587	.529	○	
		③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예산	.714	.658	○	

구성 요소	하위 변인	측정문항	공통 성	요인 적재 량	최종 문항	신뢰 도
		④노인에 대한 복지예산	.715	.687	○	
		⑤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	.765	.741	○	
		⑥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672	.541	○	
		⑦주거에 대한 복지예산	.521	.388	×	
		⑧교육에 대한 복지예산	.491	.387	×	
		①사형제도는 없애야 한다	.659	.554	○	
인 권 의 식	시민· 정치적 권리	②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 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685	.611	○	.715
		③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의 체 벌은 허용될 수 있다	.609	.502	○	
		④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이름을 밝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 같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도입되어야 한다	.637	.532	○	
		⑤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 혼잡이 나 소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677	.583	○	
		⑥에이즈(HIV/AIDS)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출국 조치를 내려야 한 다	.594	.491	○	
		⑦성인과 미성년자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	.592	.478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⑧실업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 임이 더 크다	.595	.483	○	.736
		⑨국민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항 이므로 보건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665	.572	○	

구성 요소	하위 변인	측정문항	공통 성	요인 적재 량	최종 문항	신뢰 도
		⑩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한다	.709	.606	○	
		⑪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실시해야 한다	.737	.678	○	
		⑫국내에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67	.608	○	
		⑬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자를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	.529	.417	○	
		⑭성적 소수자(동성애자)는 개인의 성적 성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615	.520	○	
		⑮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675	.594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⑯학교 교장이 10대 미혼모 여학생에게 학교를 자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그럴 수 있다	.588	.485	○	.602
		⑰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반말, 욕설 등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02	.416	○	
		⑱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	.544	.383	×	
대중매체 이용 경험	정보 이용	①신문의 뉴스와 사회면	.689	.575	○	
		②인터넷 전자 신문의 뉴스와 사회면	.730	.641	○	
		③야후나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	.633	.556	○	.716
		④공중파 TV뉴스와 시사관련 교양 프로그램	.696	.583	○	
		⑤뉴스전문 방송	.671	.544	○	

구성 요소	하위 변인	측정문항	공통 성	요인 적재 량	최종 문항	신뢰 도
의견 교환		①정부기구나 사회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된 글을 읽는다	.388	.307	×	.673
		②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이용한다	.418	.341	×	
		③인터넷을 통하여 사회문제 관련 소식을 알게 된다	.632	.469	○	
		④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에서 복지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나의 의견을 올린다	.453	.349	×	
		⑤인터넷을 통하여 사회문제 사안에 투표를 한다면 동참을 할 것이다	.650	.477	○	
		⑥인터넷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12	.717	○	
		⑦인터넷에서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714	.702	○	
시청 기능		①TV프로그램 내용이나 등장인물은 가족 간에 대화 소재를 제공한다	.764	.728	○	.870
		②TV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끼는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공유한다	.754	.723	○	
		③TV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770	.741	○	
		④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호하는 TV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787	.750	○	
		⑤TV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함께 학습한다	.686	.628	○	
		⑥TV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상호 질문과 응답의 기회를 갖는다	.729	.673	○	
		⑦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기능한다	.636	.565	○	
		⑧중요한 사회 변화에 대한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76	.613	○	
정 내재적		①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	.713	.358	×	.807

구성 요소	하위 변인	측정문항	공통 성	요인 적재 량	최종 문항	신뢰 도
치 효 능 감		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6	.360	×	.846
		②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③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나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한다				
		⑤정치는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⑥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외재적	⑦정치인들은 당선된 후에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632	.378	×	
		⑧정치인들은 당선된 후 시민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877	.803	○	
		⑨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871	.802	○	
		⑩정치인들은 단지 표를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879	.815	○	
		⑪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든지 정치 활동은 모두 마찬가지다	.621	3.70	×	

*는 역문항 처리함

Abstract

A study on the typology of adolescence'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explored the typology of adolescence'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and influencing factors with a total of 971 students (316 students from 3 middle schools, 345 students from 3 high schools, and 310 college students from 2 school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vel of factors constructing their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showed overall high average distribution; government's responsibility (4.30), effectiveness (3.88), and willingness to act (3.87), respectively.

Secondly, female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than male students do. When it comes to grades, the higher grades, the more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system.

Thirdly, the attitudes were conceptualized as consisting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effectiveness, and willingness to act. The conceptualized attitudes led the scopes of the attitudes to be classified into 8 different types; government-leading altruistic type(22.66%), private-leading altruistic type(6.69%), government-depending altruistic type(8.75%), private-depending altruistic type(8.03%), government-leading exclusive type(8.55%), private-leading exclusive type(9.37%), government-depending exclusive type(7.72%), and private-depending exclusive type(28.22%).

Fourthly, based on the analysis of logistic regression, the higher

consciousness of right regarding economy, society, and culture which were sub-variables of human right, the higher likelihood of government-leading altruistic type through 1, 2, and 3 dimensional analysis by constructing factors. In terms of the experiences of mess media, a group of students who were exposed to mess media with their parents' presence were more likely to prefer government-leading altruistic type of attitude than other groups. The stronger internal efficacy they have, the more positive attitudes they have when it comes to political efficacy.

Lastly, the result of analysis of hierarchical regression presented that government's responsibility over social welfare system would be influenced by house income, social/economic/cultural rights,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communic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experiences of mess media with parents. Also,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functioning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rades,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cial/economic/cultural rights,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communic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internal efficacy. Additionally, willingness to engage in social welfare was influenced by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cial/economic/cultural rights,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the experiences of mess media with parents. Overall, it is confirmed that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had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house income, social/economic/cultural rights,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communic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experiences of mess media with paren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ternal 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described abo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introduced as follows.

First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could be practically conceptualized as a combination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effectiveness, and willingness to act.

Secondly, the attitudes could be classified into 8 types by the 1, 2, and 3

dimensional analysis; government-leading altruistic type, private-leading altruistic type, government-dependent altruistic type, private-dependent altruistic type, government-leading exclusive type, private-leading exclusive type, government-dependent exclusive type, and private-dependent exclusive type. It is believed that this typologically unique approach could be utilized as a practical and useful tool to make a diagnosis of adolescence'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Thirdly, re-conceptualization of social welfare attitudes would probably be helpful to set a goal and direction of education in terms of social welfare. Simultaneously, this advantage would contribute to a educational structure of social welfare.

Fourthl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facilitate more deepen understandings of adolescence'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and discover latent or manifest problems and issues.

Fifth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practical plans and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attitudes about social welfare.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hat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would be evaluated in an appropriate way with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ver social welfare attitudes. Also, there should a distinguishable method to decide a proper educational approach by gender.

Sixthly, a newly designed textbook 'Society' based on 2015 curriculum could be investigated if it provides enough background nurturing positive attitudes of social welfare.

Lastly, although this study was performed over adolescence at a local level within Jeju area in terms of their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imported and utilized at a national level to verify the attitudes of entire Koreans.

Key Words : Attitudes of Social Welfare, Structur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Attitudes, Typology of Social Welfare Attitudes,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Attitudes